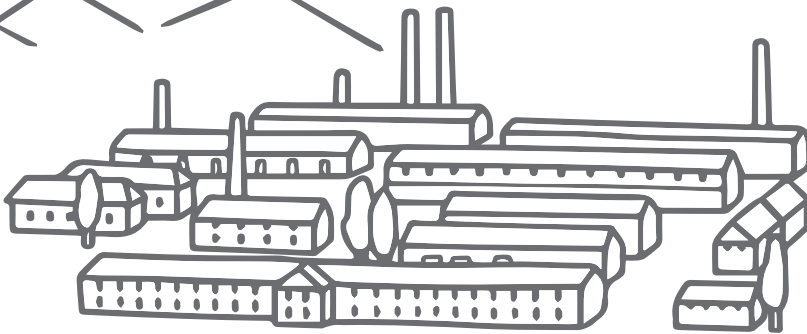


특별기획전 「조병창, 끝나지 않은 역사」 연계  
국사편찬위원회 - 인천도시역사관 공동학술회의

## 일제 말 성·노동 동원의 실상과 ‘강제성’





특별기획전 「조병창, 끝나지 않은 역사」 연계  
국사편찬위원회 - 인천도시역사관 공동학술회의

## 일제 말 성·노동 동원의 실상과 ‘강제성’

■ 일시 : 2020년 9월 10일(목), 13:30-18:00

■ 장소 : 인천도시역사관 3층 강당

구분	시 간	내 용
등록	13:30-13:40	등록
전시 관람	13:40-14:10	특별기획전 「조병창, 끝나지 않은 역사」 관람
개회	14:10-14:30	사회 이희인(인천도시역사관)
		인사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 광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관 장 유동현
		환영사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지용택
		사회 한금희(국사편찬위원회)
학술 회의 발표	14:30-15:15	발표1 <b>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b> 발표 : 이상익(인천대학교) 토론 : 배성수(인천광역시립박물관)
		발표2 <b>총동원체제와 조선인 ‘위안부’의 동원</b> 발표 :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황병주(국사편찬위원회)
	16:00-16:45	발표3 <b>강제동원·강제노동 부정론에 대한 종합적 비판</b> 발표 : 김민철(경희대학교) 토론 : 정병욱(고려대학교)
휴식	16:45-17:00	장내 정리 및 휴식
종합 토론	17:00-18:00	좌장 윤덕영(국사편찬위원회)
		종합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발표1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이상의(인천대학교)	07
토론1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에 대한 토론문 배성수(인천광역시립박물관)	27
발표2	총동원체제와 조선인‘위안부’의 동원 박정애(동북아역사재단)	29
토론2	「총동원체제와 조선인‘위안부’의 동원」에 대한 토론문 항병주(국사편찬위원회)	55
발표3	강제동원·강제노동 부정론에 대한 종합적 비판 김민철(경희대학교)	57
토론3	「강제동원·강제노동 부정론에 대한 종합적 비판」에 대한 토론문 정병욱(고려대학교)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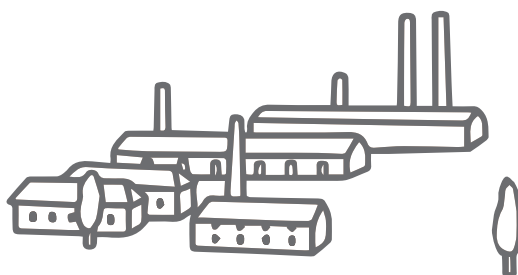


#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이 상 의 (인천대학교)

- I. 서언
- II. 인천조병창의  
노무자 동원 과정과  
조병창의 구조
- III. 인천조병창의  
노무자 구성과 노동 실태
- IV. 강제동원에 대한  
노무자의 인식과 저항
- V. 결어

목  
차







##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이 상 의 (인천대학교)

### I. 서언

이 글은 일제 말기 일본육군인천조병창(이하 인천조병창)에 강제동원되었던 12명의 노무자들의 경험 세계를 그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조선 내에 유일하게 설치된 조병창이었던 인천조병창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육군이 인천의 부평지역에 설치한 무기제조 시설이었다. 중일전쟁 도발 이후 1938년 총동원체제를 선포한 일제는, 조선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1939년 조선에 조병창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에서 전장(戰場)으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했기 때문이다.<sup>1)</sup>

인천조병창은 대규모의 강제동원이 행해진 국내동원의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다. 무기를 만들고 토목공사를 하고 운반을 하던 1만 명 이상의 ‘군속’들이 모집과 관알선, 징용, 근로보국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인천조병창에 동원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천조병창 관련 자료는 국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일본 본토 밖에 있었던 군사시설로서 일본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인천조병창의 경우 해방 직후 미군이 진주하기까지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군이 그대로 주둔하면서 일본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서를 통째로 소각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인천조병창에서 직접 노동과정을 체험한 사람들의 구술은 조병창 내부의 실상을 전해줄 수 있으므로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필자는 일제 말기 인천조병창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쉽지 않은 구술을 시도하였다. 2017년 총 12명의 조병창 강제동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친 구술을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1941년 조병창 개창 이후에 동원된 사람들로서, 동원 당시

1) 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육군은 일본 본토를 벗어나 조선과 남만주에 각각 1곳씩 조병창을 설치하였다. 조선에서 조병창 부지로 선정된 부평은, 공업이 발달한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천항에서 멀지 않고 경인선이 인접해 있어 곧바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게다가 부평평야가 있어 100만평 가량의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육군은 이곳에 조병창을 만들어 중일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선으로 곧바로 무기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 25, 2016.8 참조.

만 13-17세였으며, 구술을 채록할 당시에는 80대 후반-90대 전반의 나이였다. 각 구술자의 인적사항과 동원기간, 조병창에서의 담당 업무와 특기사항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구술자별 동원 개황과 조병창에서의 담당 업무 (동원시기 순)

구술자 성명	출생 연도	동원 지역	동원 당시 학력	동원 기간	조병창 담당 업무	동원 관련 내용
김우식	1925.10.08	충남 청양	국민학교 졸	1941.05 -1944.12.15	제2공장에서 총검 방아쇠 연마	주변 권유로 돈 벌고자 지원. 탈출 후 한병대에 지명수배. 평양군무예비훈련소로 이중동원.
왕명근	1927.06.21	전북 익산	국민학교 졸	1942.03 -1945.08.30	제2공장에서 단검두 제작	주변 권유로 돈 벌고자 지원. 선반기계에 염지손가락 일부 절단.
지영례	1928.10.15	인천 부평	소학교녀 2학년 자퇴	1942.09 -1945.08.15	병원(의무과) 서무과 근무	재학 중 '정신대' 동원을 피해 단체로 자퇴한 후 지원. 조병창 인근 거주.
최덕원	1927.08.05	충남 보령	국민학교 졸 (청년훈련소 2년)	1943.01 -1945.08.30	제2공장에서 장부 정리	경찰의 지원병 강요를 피해 군속으로 지원. 해방 후 문서 소각 목격.
장화두	1928.01.10	경북 칠곡	국민학교 졸	1943.04.01. -1945.07.15	제2공장에서 방아쇠 제조	공부를 시켜 준다고 하여 기능자양성소 입소. 고역을 피해 탈출하여 도피 생활 중 해방.
김상현	1928.02.25	강원 춘천	국민학교 고등과 졸	1944.04.01. -1945.08.31	1공장 서무과 작업반. 2공장으로 주물 배달	학교 졸업 직후 진학 대신 8명이 함께 기능자양성소 입소. 채병덕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윤용관	1929.09.12	충남 공주	국민학교 5학년 재학	1944.05 -1945.08	지하 검사계에서 총검 완성품 검사	5학년 때 학교서 임원 2명 동원. 작업 도중 옷이 올랐고 해방 후 한센병 발병.
김학수	1929.01.24	경기 여주	국민학교 졸	1945.01 -1945.08.15	철근, 목재를 나르고 조병창 배수로 공사	부친에게 영장이 나와 대신 징용. 형은 징병되어 일본에 가 있었음.
유만중	1927.08.20	경기 김포	국민학교 졸	1945.03 -1945.08.15	조병창 안에서 기차 물자 하역	경성전기 근무 중 재직자 서류처리 미비로 징용.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음.
변명식	1928.08.02	경기 여주	국민학교 졸	1945.03 -1945.07	2공장에서 검사 후 총 노리쇠에 마크를 새김.	졸업식 직후 영장이 나옴. 엄격한 규율과 이질 사상이 두려워 탈출한 후 피신 중 해방.
오상기	1927.12.13	서울 종로	동성상업학교 졸	1945.06 -1945.08.16	시미즈구미(清水組)에서 굴착작업 차트 관리	총독부 운수부 근무. 징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일본인 수위와 다투자 영장 발부.
전진수	1930.02.05	경기 고양	경신중학교 2학년 재학	1945.07 -1945.08.15	부평 산중턱 터널 뚫는 현장서 돌을 나름	학교에서 2학년 120명 단체동원. 일본 군인들과 방어진지 구축, 미쓰비시 사택 거주.

본고에서는 이들의 구술을 통해 인천조병창의 노동력 동원과정, 조병창의 구조와 노동실태, 노무자의 일상과 노동조건, 규율과 그에 대한 저항, 강제동원에 대한 인식과 해방 후의 귀가과정 등을 확인하여, 인천조병창의 진상과 강제동원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천조병창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측면이 미지 상태이므로, 이들의 구술을 통해서 조금씩 파악해 나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인식의 최대치가 될 것이다.

## II. 인천조병창의 노무자 동원과정과 조병창의 구조

### 1) 노무자 동원 방식과 과정

일본육군에 의한 인천조병창의 설립과 운영은 일제의 조선병참기지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1939년부터 인천조병창 측은 일본 건설업체에 공장건설을 맡기고 근로보국대를 동원하여 노동력을 충당했다. 이후 1941년 개창과 함께 대대적으로 조병창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구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대부분 국민학교 졸업생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학교에서는 일본어와 기본적인 연산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황국신민화 교육을 행하여 학생들이 전사자의 병사 혹은 노동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병창에서는 동원 후 바로 공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sup>2)</sup>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모집’의 형식과 ‘관알선’, ‘징용’의 형식으로 강제동원되었다. 모집의 경우는 신문 지면을 통해 자격 조건을 적어 모집 내용을 공고하거나 조병창 관계자의 개인적인 소개에 의한 연고모집을 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관알선의 경우는 각 시, 군 지역으로 언제까지 몇 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면, 그에 맞추어 행정기관에서 지역민들을 부추기면서 알선하고 모집에 응하도록 재촉하였다.

구술자 중 김우식과 왕명근은 주변의 권유로 돈을 벌고자 ‘모집’에 응해 지원을 하였다. 이에 비해 지영례는 ‘정신대’ 동원을 피하기 위해, 최덕원은 지원병을 피하기 위해 관에서 알선하는 대로 군속으로 지원하였다. 이렇게 모집의 형식으로 동원된 사람들에 비해 ‘국민징용령’이 시행되기 시작한 1944년 8월부터는 징용 영장을 받고 동원되었다. 김학수는 아버지가 징용 영장이 나오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원되었다. 한편 총독부 직원이었던 오상기는 일본인과 다투자 마자 며칠만에 바로 징용영장이 나왔고, 경성전기에 다니던 유만중은 재직자 처리가 되지 않아 징용되었다.

한편 구술 대상자 중에는 학생들의 비중이 적지 않다. 12명 중 6명이 학생으로서, 조병창에 동원된 인원 중 어린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

2) 인천조병창의 건설 공사를 위해 초반에 경기도 김포, 강화 등 주변지역에서 근로보국대로 동원된 사람들은 아직 공장 생활과는 무관하였으므로 무학인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인천조병창이 개창된 1941년 이후에 동원된 사람들의 구술을 토대로 내용을 서술하였다.

았음을 보여준다. 본 구술작업의 대상자들은 모두 90대의 고령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에서 애초 구술 대상자의 상한선을 1925년생으로 정하였으므로 강제동원의 중심 대상자였던 일반공보다는 학생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구술의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구술작업은 학생들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과 한계를 지닌다.<sup>3)</sup> 그 중 1명(윤용관)은 국민학교 재학 중에 동원되었고, 3명(김상현, 변명식, 장화두)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에 동원되어 그 중 2명은 조병창의 기능자양성소로 들어갔다. 이외 2명(전진수, 지영례)은 중학교 재학 중에 동원되었는데, 그 중 전진수의 경우는 2학년 학생 120명이 학생근로보국대로 동원되어 인천조병창 시설을 옮길 터널 뚫는 작업을 했다.

## 2) 인천조병창과 기능자양성소의 구조

인천조병창은 1939년 부평에 부지를 잡아 공사를 시작한 이래 공장과 기능자양성소를 준공하여 1941년 5월 5일 개창식을 가졌다. 인천조병창에는 부평의 제1제조소와 평양의 제2제조소가 있었고, 제1제조소 아래에는 3개의 공장이 있어, 각 공장마다 소총과 탄약, 총검, 군도 등 무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순차로 나누어 작업하였다.<sup>4)</sup> 부대시설로 기숙사, 병원, 매점 등이 있었고 기능자양성소를 설치해 운영하였다.

조병창은 매우 넓었다. 들판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 삼릉공장과는 비교도 안되게 컸다. 조병창의 드넓은 터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주변과 차단되어 있었다. 조병창의 주소는 백마정 1번지였고, 조병창 정문은 부평역 방향으로 나 있었다. 철문으로 된 정문 양 옆으로는 기둥이 있었고, 정문 주변에서 군인들 몇 명이 지키고 있었다. 정문 밖에는 큰 노깅이 있었다. 벽돌로 된 담장의 동쪽과 북쪽에는 나무 셋문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초소가 있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 조병창 안에

3) 본 구술작업의 대상자들은 모두 90대의 고령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에서 애초 구술 대상자의 상한선을 1925년생으로 정하였으므로 강제동원의 중심 대상자였던 일반공보다는 학생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구술의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구술작업은 학생들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과 한계를 지닌다.

4) 인천조병창의 제1제조소와 제2제조소, 민간 하청공장에서 생산하던 병기의 종류와 수량은, 매달 99식 소총 4천정, 총검 2만개, 소총탄환 70만발, 포탄 3만발, 군도 2만개, 차량 2백량에 달하였다. 나아가 일본 본국의 조병창들이 공습으로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인천조병창의 생산량을 대폭 늘려, 1945년 5월부터는 매달 99식 소총 8천정의 생산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잠수정 제작에 필요한 기계를 만들어 당시 육군의 지시로 비밀리에 잠수정을 제작하고 있던 인천의 조선기계제작소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宮田節子 編·解説, 앞의 책, 1989, 117쪽 ; 陸軍造兵廠, 『昭和二十年度 各造兵廠作業計畫』, 1945.3 ; 이상의, 앞의 논문, 2016.8, 172~173쪽)

있는 공장 건물들은 규모가 매우 컸다. 큰 공장이 몇개쯤 있었던 듯하다. 원공장 건물은 처음부터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건물이 들어섰다.

매일 엄청난 분량의 99식 소총을 생산하고 수만 명을 수용한 방대한 조직이었던 인천조병창의 제1제조소는 3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소총 한 자루를 만들려면 80여 가지의 부속이 필요했는데, 1공장에서 주물을 만들어내면 2공장에서 그것을 깎아 부속으로 만들었고, 3공장에서는 그 부속을 조립하여 무기를 완성하였다.

제1공장의 사무직에 배치되었던 김상현에 의하면, 1공장은 대규모 강판을 땅땅 찍어내던 판금(板金)공장, 시뵈겅게 쇠를 달구어 각종 부속의 모형을 찍어내던 단조(鍛造)공장,<sup>5)</sup> 쇠를 달구었다가 깎기 쉽게 잘 물러지도록 숯불에 오래 담갔다 식히는 조질(調質)공장,<sup>6)</sup> 나무가 뒤틀리지 않도록 폭 찢서 숨을 완전히 죽이는 목조(木造)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2공장은 선반(旋盤)공장으로, 선반 수백개가 뿔뿔하니 들어 차 있었다. 조병창 내에서는 2공장의 규모가 가장 컸다. 군속이 공장 안에 여러 줄로 나란히 늘어서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었다. 무척 커다란 건물들이 죽 연결되어 있었고, 건물 가운데 쇠기둥이 줄지어 있었다. 쇠기둥 위에는 돌아가면서 피땀줄을 길게 연결해 놓았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기계에 전기를 넣어 자석도 기능하게 하고 피대도 돌아가게 하여 작업을 했다. 공장 안에서는 각 부서마다 정해진 부속만 만들었다. 총열을 만드는 부서, 탄창을 만드는 부서 등 다양한 부서가 있었고, 각 부서는 여러 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한 반, 저쪽에서 한 반씩 여러 반이 따로따로 근무를 했다.<sup>7)</sup>

제2공장 옆으로는 제3공장인 조립(組立)공장이 있었다. 3공장에서는 2공장에서 나온 부속들을 가져가서 조립하여 총을 완성하고 칼을 만들어냈다. 1, 2, 3공장을 거쳐 완성된 총과 칼들은 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검사실은 지하병커에 있었다. 지하병커는 한쪽에서 총을 쏘아 성능을 시험할 정도로 길게 되어 있었고 불빛도 밝았다. 한쪽에는 책상이 있어서 총을 올려놓고 있었다. 조병창 초반에는 총을 만든 후 일일이 전부 쏘면서 검사를 했다. 그러나 1945년 무렵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씩

5) 단조란 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6) 조질은 담금질 후 약 400℃ 이상의 온도에서 재차 뜨임질을 하는 철강의 열처리 작업이다.

7)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저절로 발사되도록 하여 검사를 했다. ‘일본이 망해갈 무렵에는 생산이고 뭐고 엉망이 되었고, 총도 총알이 나가기만 하면 합격, ‘오케이’였다.’<sup>8)</sup>

조병창에서는 기능자양성소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sup>9)</sup> 기능자양성소에는 국민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제1기 양성공은 1942년 4월 1일에 입학식을 하였다. 기능자양성소는 조병창과는 2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2층으로 된 기숙사 건물 세 동이 있어 다 같이 합숙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숙사 옆으로는 목욕탕과 식당이 붙어 있었다. 반대편 방향 아래로 운동장이 있었고, 운동장을 지나가면 수업을 하는 교사 세 동이 있었다. 그런데 기능자양성소는 당초 의도한 기능 훈련의 역할은 못하고 숙식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기능자양성소는 약간 산쪽으로 있었다. 뒤로는 전부 산이었고 산으로 길이 이어졌는데, 평평하게 깎은 야트막한 산이 있었고, 그 산을 넘으면 주안염전이 나왔다. 그 산 위에는 대공포 모양으로 나무 전봇대를 세워 위장해 놓았다. 주말이면 양성소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 놀면서 그 전봇대를 이리 저리 끌고 다녔다. 그러면 선생들이 와서 주의를 줬다. 미군들이 사진을 찍으면 비행기를 공격할 대공포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것으로 자리를 옮기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조병창에는 자체 병원도 설치되어 있었다. 거대한 규모로 무기를 생산하고 있던 노동현장의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었다. 의무과라 부르던 조병창의 병원은 개천 옆에 있는 흰색의 2층 건물 한 채를 따로 쓰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치과가 구분되어 과마다 칸칸이 공간을 따로 쓰고 있었고 입원실도 있었다.

8)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9) 기능자양성소는 1939년에 제정된 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중에서, 연령 16세 이상의 남자 노동자를 상시 200명 이상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는 기능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설치되었다. 조병창은 지정 사업 중 하나인 ‘銃砲 彈丸 水雷(어뢰) 및 兵器類 製造業’ 공장에 해당하였다.(大同書院編輯部 編, 『勞務統制法規總攬』, 大同書院, 1942, 371-376쪽 참조)

10) 장화두(1928년생, 경북 칠곡),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 Ⅲ. 인천조병창의 노무자 구성과 노동실태

#### 1) 노무자 구성과 노동현장에서의 역할

일본에서는 패전 직후 1945년 8월 15일 현재 각 조병창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의 숫자를 조병창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 두었다.<sup>11)</sup> 그러나 인천조병창은 그 조사의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따라서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종사하고 있었는지 그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강제동원 관련 명부를 상호 비교해서 인천조병창의 구성원은 최소 1만 명의 대규모였으며,<sup>12)</sup> 기능자양성소는 인원이 매 학년 300명씩 3개 학년에 총 900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내용 또한 장화두의 구술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인천조병창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공장의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무기의 생산 공정을 담당하였고, 기차에서 원자재를 옮기는 하역작업을 하거나 터널을 파는 토목공사에 배치되거나 조병창 소속 병원에서 서무를 보는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되어 있었다.

기능자양성소 양성공이었던 김상현은 1공장의 작업반에 있으면서 1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쇠를 달구어 찍어낸 각종 부속의 모형을 2공장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 보았다. 이에 비해 김우식은 2공장에서 99식 소총의 방아쇠를 깎았다. 전기 자석판에 주물공장에서 나온 방아쇠 만드는 쇠를 딱 붙여놓고 그라인더라고 하는 연마기로 한쪽 면을 판판하게 깎고,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다른 면을 깎는 작업이 그가 맡은 일이었다. 변명식은 2공장에서 검사를 담당했다. 부품을 만들면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고 탄창에 쇠도장을 찍어 주는 일이었다. 완성된 부품 중 좋은 것만 챙겨서 도장을 찍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들어오면 무조건 합격이었고, 덮어놓고 도장을 찍었다.

국민학생이던 윤용관은 지하병커 검사실에서 완성된 총과 칼을 시험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다. 전쟁이 한창이고 무기가 부족했던 때라 불합격은 없었다. 중학교에 진학을 하려다가 공부를 시켜 준다고 하여 조병창 기능자양성소로 간 장화두 일행은, 양성공으로 가서 1, 2, 3공장에서 배정된 일을 하였다. 장화두도 2공장에 소속되어 소총의 방아쇠 만드는 일을

11) 日本兵器工業會, 『終戰直後の造兵廠現況綴』, 1945.

12) 이상의, 앞의 논문, 2016.8, 178~180쪽.



하였는데, 하루에 못해도 200-300개는 만들었을 것이다.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가 근무한 병원 서무과는 건물 정면의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옆의 문이 있는 곳에 있었고, 서무과 옆으로는 진료실이 이어졌다. 병원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환자들이 오면 종이로 된 진찰권에 이름을 쓰고 해당 과의 도장을 찍어준 후 그리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유만중에게 배정된 일은 하역작업이었다. 조병창 안까지 기차로 들어온 물건을 하차하는 일인데, 물건은 주로 장작과 동전이었다. ‘도로쿠’에 장작을 가득 싣고 오면 그것을 내려놓았다. 웬만한 건 창고로 날랐고 보통 하역을 하면 밖에 노적을 하였다. 하역장에는 중국돈과 쇠붙이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다.

징용영장을 받은 오상기는 조병창에서 굴파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시미즈구미(清水組)로 동원되었다. 그에게는 사무실에 앉아서 동원된 인원을 파악하고, 땅굴 파는 작업 진도를 체크해서 매일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임무로 주어졌다. 그는 조병창의 일을 했지만 정작 조병창에는 들어가보지 못했다. 조병창은 군사기밀이라고 해서 전혀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학생 전진수는 일본 군인들이 굴 뚫는 작업을 보조했다. 이들의 작업 목표는 일본군의 최후 방어를 위해 인천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산을 양쪽에서 뚫어 관통시키는 작업이었다. 착암기도 없이 군인들이 긴 정과 해머를 가지고 남포구멍을 내서 그곳에 폭약을 넣어서 폭발시켰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곳에서 나온 젖은 돌부스러기, 흙부스러기를 가마니에 쌓아 둘이 앞뒤에서 메고 계속 저 날랐다.

## 2) 동원 노무자의 일상과 노동환경

인천조병창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모양의 옷을 입었다. 군복처럼 생긴 작업복이었다. 모자는 ‘센토보’라고 부르는 전투모(戰鬪帽)였고, 신발은 농구화처럼 생긴 작업화였는데 그 위에 각반을 했다. 공장에 출근하면 입고 간 옷과 모자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했다.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다 보면 옷에 온통 기름이 묻었기 때문이다. 의무과에서 일한 지영례도 조병창에 들어가면서 ‘국방색’으로 된 새 유니폼을 사 입었다. 옷은 미리 만들어진 기성복이 있었다.<sup>13)</sup> 그러나 배수로 공사를 하던 김학수는 작업복이 나오지 않았고, 들어갈 때 입고 간 옷차림 그대로 쌀쌀한 날

13) 윤용관(1929년생, 충남 공주),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을 지냈다. 조끼도 없는 저고리 차림이었다. 바람이 불 때면 저고리 자락이 휘날려 살이 그냥 드러나곤 했다.

본 구술 작업 과정에서 대부분의 구술자가 공통적으로 조병창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로 언급한 것은 배가 고팠다는 내용이다. 세 끼니를 챙겨 먹은 건 좋았지만 항상 배가 고팠다. 쌀에는 잡곡이 많이 섞여 있었고 반찬은 국이든 찌지든 언제나 짭짤한 한가지였다. 그래도 모두 젊은 사람들로 배가 고팠으므로 다 굶어먹고 밥풀 하나 남기는 사람이 없었다.

배가 고파도 월급이 나오면 간식을 사 먹으면 되겠지만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조병창에서 받는 돈은 봉급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액수가 매우 적어 쓸만한 여유가 없었다. 최덕원은 월급을 조금씩 받았는데 얼마나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매우 하찮은 수준이어서 배가 고파도 뭘 사먹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뱃값도 안 되었다. 시장하니까 가끔 간식도 사 먹고 싶었는데, 월급으로는 그러기에도 부족하였다. 집으로 돈을 부치기는커녕 오히려 집에서 부쳐 와야만 쓸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변명식, 유만중은 월급을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다. 윤용관도 1년 4개월을 그곳에 있으면서 월급도, 여비도 받은 기억이 없으니 따지고 보면 참 억울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 ‘애국’하는 일이라고 했으므로 월급 이야기 같은 건 꺼낼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조병창에는 많은 숙박시설이 필요했다. 기숙사와 한인사택, 일본인사택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거기에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부천 소사 같은 곳에서 출퇴근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조병창 내부에 막사도 여러 채 지었다.

조병창에는 조선인 일반공의 사택이 따로 있었다. 조병창에서 20~30분 거리로, 기능자양성소 옆으로 독을 하나 사이에 두고 사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 숙소는 일본 사람들의 숙소와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조선인만 거주하는 한인촌이었다. 집이 기다랗게 죽 이어진 나가야[長屋] 모양이었다. 넓은 터에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기와집이 1백 채 가까이 일제히 들어서 있었고, 기다란 건물 사이에는 사람들이 다닐만한 길을 냈다. 일반공 중에는 이 숙소에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날마다 같이 출퇴근을 했다.

기숙사에 머물던 일반공들도 있었다. 그 숙소는 일성료(一性寮, 잇세료)라고 불렸다. 단층 건물로 아주 작고 어둡좁은 집이 길게 들어서 있었다.

긴 건물에 칸칸이 문만 내어 놓고, 1, 2, 3호실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방만 죽 길게 연결되어 유치장 같은 모양이었는데, 조병창 군속들만 거주하는 곳으로, 아마 몇 천 명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바닥에는 일본식으로 다다미가 깔려있었고, 1인당 두 장씩 담요를 받으면 다다미 위에 한 장은 깔고 또 한 장은 덮고 잤다.

기능자양성소의 기숙사에서는 방마다 10명 가량이 함께 잤다. 양성소 기숙사는 대개 한두 살 차이의 동년배로 구성이 되었다. 그런데 동향에서 함께 간 친구들은 서로 자주 만날 수가 없었다. 그 시절 일본은 언제나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배치하였다. 이곳의 방 역시 다다미방이었다. 다다미는 빈대 소굴이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다다미에 숨어 있던 빈대가 물어서 따끔하고 아픈 것이 밤새 이만저만 고통스럽지가 않았다.<sup>14)</sup>

하역을 하던 유만중 일행은 창고 같은 곳의 지금의 군대 내무반처럼 꾸며진 마루방에서 50명 정도가 나란히 누워서 잤다. 오상기가 일하던 시미즈구미 공사장의 숙소는 여러 개의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 양쪽으로 나무판자를 깔고 그 위에서 여러 명이 잠을 잤다.

조병창에서의 일상은 아침, 저녁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일요일에는 일을 쉬었고, 저녁에 인원점검 전까지만 들어오면 되었다. 그나마도 해방 직전에는 ‘월월화수목금금’이라고 하면서 공휴일이 의미가 없어졌고 일요일에도 일을 했다. ‘게스게스카 스이모꾸킨킨’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불렀다.<sup>15)</sup>

한편, 조병창에서는 부상이나 사고가 잦았다. 사람들도 많거니와 공장 일에 낯선 사람들이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병창의 규모가 크고 부상자도 많았으므로 조병창에는 전속 병원이 있었다. 날마다 많은 환자들이 의무과로 들이닥쳤다. 조병창 병원 서무과에서 일했던 지영례는 일하다 팔이 떨어진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참 많이도 다녀갔다고 회고했다.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 어린 학생들이 많아 사고와 부상이 더 잦았다.

14) 김상현(1928년생, 강원 춘천)

15) 최덕원(1927년생, 충남 보령)

### 3) 노동현장의 단절과 통제

구술자들은 조병창에 들어가면 굴뚝 속에 들어간 것처럼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고 표현하였다. 조병창은 그 자체로 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숙소와 작업장의 한정된 지역에서 정해진 길 외로는 가볼 새도 없고 분위기가 삼엄하여 가볼 수도 없었다. 몇 공장 누구라고 하는 표식이 옷에 붙어 있어서 외부인은 절대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조병창에서는 공장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도 어려웠고 알려고 해도 안 되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었다. 그만큼 조병창 내부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다.<sup>16)</sup>

조병창에서는 오직 한 가지 일만 담당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했다. 1942년 봄 조병창에 들어간 왕명근은 해방될 때까지 선반공장인 2공장에서 한 가지 일만 했다. 총에 찌르는 단검의 머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 공장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한 가지 일만 담당했다. 칼머리를 만들 때도 동그란 쇠를 깎는 사람, 자르는 사람, 흠을 파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옆면을 깎는 사람은 언제나 옆면만 깎았고, 구멍을 뚫는 사람은 언제나 구멍만 뚫었다. 모두 자신이 맡은 것만 만들었을 뿐, 바로 옆에서 뭘 만드는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각자 정해진 부속만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를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3년 넘게 조병창에 있었지만 총 만드는 과정도 알지 못하고, 완성된 총을 한번 잡아본 적도 없다.

조병창은 참으로 감시가 심하고 규율이 엄했다. 조병창장이 말을 타고 다닐 때면 저 멀리 있어도 경례를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헌병들이 쫓아와 경을 쳤다. 지영례는 헌병들이 군복에 긴 칼을 차고 ‘철컹 철컹’ 소리를 내면서 긴 구두를 신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아무 데나 숨곤 했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사거리 귀퉁이마다 검문소가 있었고 그 안에는 헌병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었다. 도망을 가거나 누군가 나쁜 짓을 할까봐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었다. 누가 도망이라도 쳤다 하면 경비가 더 심해졌다.

16)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작업장 내의 구타도 적지 않았다. 공장마다 헌병대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는 지금의 중사나 상사급인 군조였다. 고초의 위인 군조는 그리 높은 계급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권한이 세고 무서웠다.<sup>17)</sup> 군조는 긴 칼을 차고 다녔는데, 그에게 잘못 걸리면 호되게 맞고 거의 죽어나갔으므로 공원들은 그를 ‘사자’라고 불렀다. 무기의 생산 책임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사람을 두들겨 잡다시피 하면서 바짝 더 심하게 굴었다. 때때로 책임량을 다하지 못하면 잔업을 했다. 교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하던 일을 밤에도 잠을 안자고 계속해야 하는 야근이었다.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줄면 큰일이었다. 그런 때는 헌병대가 작업장에 와서 순찰을 돌곤 했는데, 헌병들이 슬슬 돌아다니면서 저만치서 바라보거나 옆으로 지나갈 때는 진짜 무서웠다.<sup>18)</sup>

## IV. 강제동원에 대한 노무자의 인식과 저항

### 1) 강제동원과 일제에 대한 인식

구술자들의 인천조병창과 강제동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김우식은 조병창에 있던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방아쇠 꺾는 일만 하였다. 하루에 방아쇠를 얼마나 많이 꺾었는지 헤아릴 수도 없었다. 다른 기술은 배운 것이 없다. 병기공장에 다니면서도 총 한 자루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이 무엇을 만드는지도 모르는 채 겨우 부품 하나 잘 만드니 생각해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일만 배웠다. 배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우식은 4년 동안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결혼을 하고도 아내와 떨어져 살아야 했다. 남들보다 오랫동안 조병창에 있었지만 매일 조병창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고 공장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분위기가 그러하니 그들은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현실을 피하고 싶었다. 김학수는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B-29가 떴다고 사이렌이 울리면 다 같이 방공호로 들어갔다. 한 시간 가까이를 일하지 않고 방공호에 숨어 있었는데, 그는 그 시간이 좋았고 매일 B-29가 기다려졌다. 이러한 마음으로 조병창에 갔으므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거의 생각나지 않는 사

17) 군소(軍曹)와 고초(伍長)는 옛 일본육군의 하사관 계급 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의 중사와 하사에 해당한다.

18) 변명식(1928년생, 경기 여주),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람도 있다. 변명식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때 일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기억하기가 싫다. 드문드문 떠오르는 기억 속의 조병창에는 엄청 큰 규모의 공장 건물이 있었을 뿐이다. 윤용관 역시 그 때는 한국 이름 대신 이토 쇼기치라고 불렸고, 어디를 가나 일본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던 일본말을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유만중은 TV에서 조병창이 있었던 부평에 굴이 있다고 나온 것을 보았지만 가까이서 살면서도 그 주변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조병창 사람들 사이에서는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일본은 망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일본의 전력이 미국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도 강했다. 김상현 일행은 일하던 도중 가끔 공습경보가 내리고 방공훈련을 했다. ‘앵~’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공장 옆에 있는 구덩이로 대어섯 명씩 몸을 숨겼다. 언젠가 미국비행기가 높이 떠서 김포공항 쪽으로 비행운이 드리운 것을 보고 놀랐다. 일본 비행기는 미처 올라가지 못하는 높이였기 때문이다. 중학생이었던 전진수는 친구들끼리 ‘일본은 언젠가는 망할 거다’ 하는 얘기를 했다. 아무데서나 이야기하면 ‘비국민’이 되고 큰일이 났으므로 숲에 가서 몰래 했다. 밖에서는 일본이 전쟁에 진다는 얘기는 입밖으로 낼 수도 없었다. 70년 전의 일을 떠올리면 그때 일본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참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조선인이 일본의 현실을 눈치챌까봐 조병창 간부들은 더 엄격하게 노무자들을 대했다. 그들의 감시로 인해 규율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습관처럼 몸에 배기도 하였다. 집에서 다니던 기숙사에서 다니던 출퇴근을 하면서도 지각하거나 결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택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을 해야지 지각을 하면 절대 안 되었다.<sup>19)</sup> 또한 김상현이 보기에는 도망친 몇 명 외에는 왜정 때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나태한 사람,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없어 보였다. 일할 때도 간부들하고 부딪히거나 하는 행동은 용납이 안되었다. 그들은 이미 국민학교에서 거듭된 황민화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다.

## 2) 탈출을 통한 노무자의 저항

조병창에 한 번 동원된 사람들은 자신의 임의로 그곳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일정 기간을 정해 학교에서 단체로 일하러 온 학생들을 제외하면,

19) 김우식(1925년생, 충남 청양), 지영례(1928년생, 인천 부평)

해방이 될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전쟁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인천조병창의 공장과 기숙사는 밤낮으로 쉴 틈이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혹사당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망칠 생각을 못했다. 조병창에서는 ‘각 건물 사이마다’ 곳곳에 군인들이 배치되어 엄격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다. 또한 탈출을 시도하다 걸리면 징역간다는 소문 때문에 대개는 미리 포기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동원된 윤용관도 함께 동원된 친구가 교육 후 부서를 배치받기 전에 몇 개월만에 도망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어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은 자주 했지만, 어린 나이였던 그 때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아버지 대신 징용된 김학수도 도망을 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붙들려 갈 것이 염려되어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삼엄한 감시로 인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노동현실로 인해 일반공과 양성공들 사이에서는 조병창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었고 탈출을 실행에 옮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본 구술의 대상자 12명 중에도 3명이 인천조병창에서 탈출하였다.

한약방에 다니다가 돈을 벌기 위해 조병창에 들어간 김우식은, 조병창에 도착하자마자 좋다고 전해들은 말과는 전혀 달라 실망했다. 무엇보다 엄격하고 자유가 없는 생활이 참기 힘들었다. 조병창에서는 돈도 벌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맨날 배고프게 지내느라 힘이 들었다. 처음부터 마음이 그러니 조병창에 애착이 가지 않았다. 늘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어 그만 두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그만 둘 수가 없었다. 사직서를 내도 받지 않았고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없었다. 더욱이 1944년에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자신도 조만간 징병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집에 들르지도 못한 채 곧바로 군대로 가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다. 더욱이 그는 혼인을 했으면서도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었다. 1944년 12월 징병 시기가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무작정 부평역 방향으로 향했다. 출근한다고 나서서는 무단결근을 하였다. 열일곱 살이던 1941년 조병창에 들어가서 1944년 말에 도망쳐 나온 것이다.

국민학교 졸업식을 하자마자 동원된 변명식은 어린 나이에 별안간 군기가 엄한 곳에 들어가니 참고 이겨내기 힘들었다. 조병창에서는 여름이면 이질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 변에서 피가 나오고 곱똥이 나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무서웠다. 하루하루 참고 있던 변명식은 결국 도망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평소 도망칠 길을 유심히 봐두고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밤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담벼락으로 향하였다. 부평이 어디쯤에 위치한지도 모르고, 그냥 울타리를 벗어나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다. 일단 도망치고 싶었다. 더 이상은 있고 싶지 않아 덮어놓고 그냥 나왔다. 둘러친 철조망을 마구 뜯었다. 사방이 전부 막사 천지인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발길 떨어지는 대로 내뺐다. 멀리 부평역이라고 쓰인 것이 보여 돌아서 산으로 올라갔다. 산 위에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내려보니, 도망친 사람을 붙잡기 위해 빨간 차와 헌병들이 역 주변 사방에 늘어서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으실으실했다.

장화두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일본으로 일하러 갔던 기능자양성소의 친구들이 폭격이 심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귀국하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B-29가 인천까지 날아와서 까마득히 높게 떠서 비행기는 보이지 않고 하얀 비행운이 남은걸 보자 겁이 났다. 이후부터 조병창에서는 공부는 완전히 그만 두고 현장에 가서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했다. 어린 나이에 열두 시간씩 일하기도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왜놈 밑에 있어서 뭐 하겠나’ 싶었다. 같이 간 동기들 몇 사람에게 탈출하자고 선동하자 다들 그렇게 하자고 응했다. 장화두는 제일 먼저 탈출을 실행했다. 부평역에 가면 휴가증이 있어야만 차표를 끊어 주었다. 탈출을 마음먹은 후 그는 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휴가증을 받아서 이름과 날짜를 지우고 자신의 이름과 새 날짜를 써넣었다. 그걸 가지고 부평역에 가서 직원에게 보여주고 대구까지 가는 표를 받았다. 개찰구에는 헌병이 딱 버티고 서 있었다. 군속 옷을 보고는 증명서를 보자고 했다. 증명서를 보여주고 무사히 통과했다. 이후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누이의 집에 숨어서 지냈는데 한 달쯤 지나서 해방이 되었다.

### 3) 해방의 감동과 귀가 과정

조병창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해방 당일에 해방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사무직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사람들 옆에서 라디오를 듣고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각자의 귀가 조치에는 차이가 있었다. 공장 밖의 공사장이나 하역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귀가할 수 있었지만, 공장에 있던 군속들은 8월 말까지 해방된 뒤에도 보름동안 귀가하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 있었다.



조병창 인근에 동원되었던 학생들은 해방 당일 바로 귀가하였다. 전진수는 어느 날 작업하다가 내려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학생들을 인솔하던 담임선생님이 ‘경성역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해방이니 전쟁이 끝났느니 이런 말은 없었다. 부평역에는 승객들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었고 기차는 기관차 앞에 태극기를 십자로 겹쳐 걸고 있어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일장기에 서툴게 검은색으로 괘를 그려서 태극기 모양으로 바꾼 것이었다. 해방이 된 것이다. 학생들은 해방이 되고 집에 간다는 생각에 전부 신이 났지만 그때는 수줍어서 노래를 부를 줄도 몰랐다. 정작 해방이 되었는데 ‘독립’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다. 식민지 생활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성역에 내려서 본 광장은 온통 들떠 있었다. 해방 만세! 해방 만세! 하고 목이 터지게 외치는 함성이 가득했다.

하역작업을 하던 유만중은 8월 15일 그날로 ‘석방’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 일본이 망했다고 말했다. 일본사람들이 그냥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전부 풀어줬다. 여비도 받지 못했고 옷차림도 집에서 입고 왔던 그대로로 옷이 너털너털해졌다. 하역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김포사람 대여섯명이 같이 집으로 갔다. 가다보니 점점 신이 났고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흘러 나왔다. 국민학교에서 배웠던 군가 ‘우미유키바’도 부르고 ‘기미가요’도 부르면서 걸어갔다.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었는데 아는 노래가 그것밖에 없었다.

이들에 비해 공장에 다니거나 기능자양성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귀가하지 못했다. 1공장 사무실에 있던 김상현도 라디오를 통해 일본 ‘천황’이 우는 듯한 목소리로 하는 방송을 들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지만 바로 집에 가지 못했다. 그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여러 차례 귀가를 독촉하는 전보를 보내왔다. 어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양성소에서 내보내주지 않아 귀가할 수가 없었다. 보름 가까이 지나자 마침내 모두 청산하고 해산한다고 하면서 조폐공장에서 막 찍어내서 잉크도 미처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새 돈을 나누어 주었다. 17월 정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돈으로 17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1년 5개월 노동의 결과였다. 어머니는 그가 귀가한 지 사흘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최덕원도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해방이 되자 조병창 모든 기계의 생산 작업은 중단되고 서울에서



오던 대학생과 중학생도 전혀 오지 않았다. 군속들만 남아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어서 집으로 보내주었으면 했지만 보내주지는 않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기계 청소만 하도록 시켰다. 일본사람들은 소각장에서 자기들 서류와 종이 박스 등을 전부 불살라 없앴다. 서류는 낱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철해서 책으로 만들어 정리해 보관한 장부들을 뭉치로 가져다 태웠다. 그 양이 상당히 많아서 리어카처럼 물건 실어 나르는 것에 다 싣고 나와서 하루 종일 태웠다. 공장 청소에는 며칠이 걸렸다. 간부들은 군속들에게 총 만드는 기계를 청소하도록 시켰다. ‘이게 다 너희들이 나중에 사용할거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깨끗이 닦도록 하였다. 기계를 닦은 천이나 입었던 옷가지도 소각장에서 불태울 때면 연기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면서 확 타올랐다.

최덕원은 조병창에 있는 동안에는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집에 갈 때는 대우를 잘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해방이 된 후 한동안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고 답답하였다. 불안한 감이 있었지만 껏속말로만 말할 뿐 크게는 말하지 못했는데, 28일쯤 되니 일본에서 명령이 왔다고 하면서 군속들을 각자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했다. 다음날 줄을 죽 묶어 놓고는 군속들을 세워놓고 돈을 나누어주었다. 평소 받던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다. 만 2년을 일한 사람으로 치면 그리 큰 돈이 아니었지만 지금 돈으로 몇 십 만 원은 되었을 것이다. 30일 조병창 안으로 기차가 끝도 없이 들어왔다. 전 부 화물 싣는 창고차로 석탄을 때서 운행하는 화물차였다. 그 기차를 경부선, 경원선, 경춘선 등 지역별로 칸을 구분해 군속들을 태웠다. 10시경 열차가 출발하자 그곳에 조병창장과 제1제조소장, 그 가족들이 나와서 환송을 했다. 그렇게 긴 시간이 끝났다.

## V. 결어

이 글은 구술을 바탕으로 일제 말기 국내 강제동원의 가장 대표적인 현장인 인천조병창의 구성과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경험세계에 대해 규명한 논문이다. 조선에 설치된 유일한 무기제작 공장이었던 인천조병창에 동원된 모든 조선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해당된다.

일제하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역할해야 했던 조선 국내로 연인원 650만 여명이 동원되어 그 숫자가 국외동

원보다 월등히 많았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노동력 강제동원의 현장인 국내 작업장은 무려 8천 5백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강제동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동원의 대상, 방법, 과정, 노동현장의 시설 규모나 구조, 동원 인원, 동원 대상자의 작업장 배치와 작업 내용, 강제동원과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식 등 대부분의 측면이 아직 미지의 상태이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구술은 그 실상을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씩 밝혀 나가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고를 작성하기 위해 진행한 구술도 인천조병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방법이었다.

구술의 과정에서 90이라는 나이로 인한 물리적 한계는 적지 않았다. 가는귀가 먹어 면담자가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해도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만 이어가는 구술자도 있었고, 지방 멀리까지 구술을 채록하러 갔는데 당일 약속을 잊고 병원으로 향하던 구술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말을 듣고 싶었다. 새로운 내용을 듣기 어렵다 해도, 6·25 전쟁의 기억과 흔재한 잘못된 기억을 떠올린다 해도, 한 조각 한 조각 그들을 통해 얻는 사실만이 지금으로선 인천조병창의 강제동원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기억이 매우 선명한 데 놀랐다.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을 뿐 70여 년 전 경험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로 각인되어 있었다. 각자 인식의 편차도 있고 기억력의 차이도 있지만, 담담하게 이어간 그들의 구술 한마디 한마디는 풍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령자인 그들을 대상으로 구술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이 글에서 언급하는 12명의 경험은 개인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경험이기도 하다.

면담의 과정에서 얻은 뜻밖의 수확이 있다. 구술자 한 분에게 꿈에서라도 한번쯤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들었다. 대부분 그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나 말을 했어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은 이미 70년도 넘는 이야기라 생각이 안 난다고, 들어서 뭐하느냐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렇게 힘들고 기억하기 싫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원의 기회를 가진 듯이 보였다.

##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에 대한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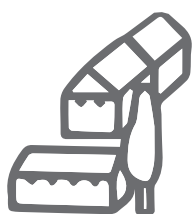
배 성 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발표자도 밝혔듯이 이 글은 일본육군인천조병창(이하 인천조병창)에 강제 동원되었던 노무자 12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조병창의 강제동원 방식과 노동 실태 등을 밝히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발표자는 2017년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전북 익산, 경남 창원, 서울, 인천 등 전국을 돌며 12명의 인천조병창 강제 동원 노무자들로부터 당시의 경험을 직접 인터뷰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 책으로 출간하였다. 광복 후 자료의 파기로 인해 직접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인천조병창의 운용 실태, 특히 노무자들의 동원 방식과 처우 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광복 후 인천조병창 자리에는 미육군군수지원단(ASCOM City)이 들어섰고, 미군은 조병창의 군사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했다. 하지만 군사시설인 탓에 민간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고, 조사와 학술 목적의 출입 역시 마찬가지여서 인천조병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발표자는 2016년 ‘인천조병창의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실태’에 대한 논고를 발표한데 이어 구술채록 작업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인천조병창의 구조와 조선인 노무자들의 실상을 어느 정도 밝혀내었다. 마침 미육군군수지원단(ASCOM City) 중 마지막 남은 부대인 캠프마켓이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반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인천조병창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 발표자의 연구가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특별한 논쟁이 필요 없는 토론이기에 발표를 들으며 느꼈던 아쉬움과 궁금증 몇 가지를 더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1. 글의 구성에 있어 조선인 노무자의 강제 동원 및 노동 실태와 조병창 시설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천조병창과 기능자양성소의 위치와 구조 등은 구술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캠프마켓 내부에 남아있는 조병창 관련 시설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또 다른 논고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병창의 구조를 밝히는 것은 차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조선인 노무자의 동원방식과 노동 실태, 그들의 인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어떨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모집이나 관알선의 방법으로 인천조병창에 동원된 노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이 가능했는지, 만약 불가능했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일본인 노무자도 퇴직이 불가능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인천조병창에는 조선인 외에 일본인도 근무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 노무자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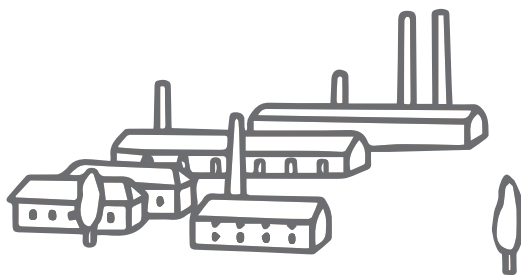
3. 구술자 중 기능자양성소에 입소했던 인물은 김우식, 장화두, 김상현 세 사람으로 구술 내용에 따르면 기능자양성소의 운영 시기와 입소 절차가 각자 상이하다. 예를 들어 장화두 선생에 따르면 기능자양성소는 3년 과정으로 자신은 1943년 4월 1일 2기생으로 입소했고, 1기생이 한 해 앞선 1942년 4월 1일 입소했다고 했다. 이에 비해 김우식 선생은 1기생이 입소하기 이전인 1941년 5월 기능자양성소에 입소해 3개월 만에 공장에 배치되었다고 해서 기능자양성소의 운영시기와 입소기간에 차이가 있다. 또 세 사람 중 시험을 치러 입소한 사람은 김상현 선생이 유일해서 입소 자격과 절차도 제각각이다. 당시 법령에서 정한 기능자양성소의 입소자격과 절차는 어떠했으며, 인천조병창의 기능자양성소는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궁금하다.

4. 구술자 중에서 학생 근로보국대로 동원되어 조병창 인근 터널 굴착현장에서 노역했던 전진수 선생과 조병창 내 굴파기 공사를 도급받았던 시미즈쿠미로 동원된 오상기 선생을 조병창 노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조병창으로 직접 동원된 다른 사람들과는 동원 방식과 노동 실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 총동원체제와 조선인‘위안부’의 동원 :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문제를 중심으로

박 정 애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 II. 정신대라는 말과  
의미 변화
- III.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 IV. 맺음말





# 총동원체제와 조선인‘위안부’의 동원 :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문제를 중심으로

박 정 애 (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정신대와 위안부, 그리고 성노예.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일본군의 성 착취 시스템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말들은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전쟁 기간 동안 당사자를 가리켰던 말 차원이나, 그 역사적 성격을 고려하여 학술적·실천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말 차원 모두에서 그렇다. 이 말들은 모두 아포리아다. 이 말들에는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는 보통명사 또는 고유명사로서의 성격과 뜻이 얹히고 설킨 채 뒤섞여 있다. 현재 학계와 시민 사회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위안부’라는 말이 전쟁 기간 당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드물게 사용되었으며(박정애, 2015, 195), 그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준다는 성노예라는 말은 전쟁 기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말들이 갖고 있는 역설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있어 왔다. 이 가운데 가장 의미가 분명한 말은 ‘성노예’이다. 1992년부터 유엔(UN) 기구의 의제 중 ‘현대형 노예제’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성노예(sexual slavery)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신혜수, 1997, 361-378; 정진성, 2016, 7-9).<sup>1)</sup> 국제사회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예제라는 개념으로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해 왔고, 1990년대 이후 전쟁 및 무력분쟁 하의 성적인 지배를 통한 인권침해 문제가 의제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노예제에 성적 지배의 의미를 더한 성노예제 개념이 발달했다(安部浩己, 2015, 36-38). 성노예제 개념이 구체성을 갖춰가는 데 핵심 역할이 했던 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의였으며 이를 반영한 인권법의 발전과 더불어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1) 처음에는 위안부의 직역인 ‘comfort women’을 사용했으나 유엔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소위원회에서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유사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도록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노예로 지칭되었다.

성노예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아갔다.<sup>2)</sup>

성노예가 1990년대 이후 진보한 여성인권 의식과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라는 목표 위에 성립된 용어였다면, 그보다 훨씬 앞 시기에 생겨난 정신대나 위안부라는 말은 의미의 다이내믹한 변모를 거듭해야 했다. 그러나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을 훑어보고 각 시기의 기능들을 검토해보기도 전인 1990년대 이후 ‘정신대이자 위안부’인 피해생존자의 등장과 함께 빠르게 현실 사회 속에 퍼져나갔다. 그 이전까지 제도교육이나 역사학계는 전시 시기 강제동원 문제나 여성사 주제를 다루는 데 인색했었고, 정신대나 위안부라는 말은 전시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나 문제해결 운동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그 의미를 확보해갔다.

동시에 학술적인 검토도 이루어졌다. 처음에 연구자들이 강조한 것은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였으며, 따라서 두 용어를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1994년 여순주는 그간의 연구들이 근로정신대와 군위안부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성적 도구로 동원된 군위안부와 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신대는 1940년대 이후 생긴 용어이며 따라서 1930년대 초부터 동원된 군위안부를 포함하여 통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여순주, 1994, 2-3). 1997년 강만길은 ‘여자정신대가 곧 위안부는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하면서 “정신대라는 말은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들이 왜 여자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로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봄으로써 일제 강점기 조선처녀들이 위안부가 되어간 진상의 일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강만길, 1997, 13-14). 2006년에 강정숙은 조선에 정신대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은 1940년경이었으며, 1943년 이후 여자근로정신대가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정신대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동원 피해자인 여자근로정신대 여성들이 성적 피해자로서 인식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군위안부와 정신대, 여자근로정신대의 용어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정숙, 2006, 315-316).

한편 두 용어의 차이는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 정신대/위안부 피해자

2) 처음에는 위안부의 직역인 ‘comfort women’을 사용했으나 유엔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소위원회에서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유사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도록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노예로 지칭되었다.



가 서로 뒤섞여 여성의 성동원 피해로서 인식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식민지 피해의 특성 안에서 독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2001년 정진성은 대체로 정신대가 근로동원, 위안부가 성 동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정신대로 기억하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위안부 문제를 정신대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해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와 정신대를 혼용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단순히 구분하는 것은 또 다른 역사적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다(정진성, 2001, 34-57). 2003년 윤명숙 또한 정신대가 곧 군위안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지만 1990년대 초에도 일반 민중이 정신대를 군위안부의 동의어로 인식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적어도 당시 조선 민중에게 정신대는 징용과 같은 말이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신대라는 이름 아래 군위안부 징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윤명숙, 2015, 383-384). 2015년 한혜인은 일본 측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신대는 애국을 강조하는 말로서 러일 전쟁기부터 사용된 선전언어였다고 설명했다. 총동원체제기 이후 정신대는 징병이든 징용이든 위안부 동원이든 전시협력 법령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를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정신대와 위안부의 의미가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한국전쟁 이후였다고 주장한다(한혜인, 2015, 110-114). 2019년 박정애는 정신대가 조선에서 총동원체제 이후 일상화된 동원의 언어이며 위안부와 정신대는 역사부정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혼동된 것이 아니라 착종된 언어라고 주장했다. 공권력의 위안부 동원과 그 과정에 개입된 은폐 문제를 식민지 조선인의 감각으로 보여주는 용어이며 그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식민지성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이다(박정애, 2019, 55-57).

선행연구 검토에 따르면 정신대는 일본에서 러일전쟁 중 등장한 언어이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1940년대 이후 등장했다. 정신대와 위안부는 각각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와 정진성의 연구 이후 두 용어 사이의 혼동 그 자체를 역사적 현상으로 보고 원인을 분석해야한다는 흐름이 나타났다. 2019년 박정애는 그 부분이야말로 ‘위안부’ 동원의 식민지적 성격을 드러내는 지점임을 강조했으나, 지적에 그쳤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처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서사가 역사를 잘못 이해한 결과가 아니라 총동원체제기부

터 1990년대까지 존재했던 역사적 현상으로 보고 그 배경과 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정신대라는 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 과정에서 생겨나고 파생된 이 말이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듯이 1940년대 이후가 아니라, 총동원체제가 이후에 식민지 조선인의 일상에 파고들었음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이 서로 섞여 인식되고 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두 개념이 ‘혼동’되었다는 기존 견해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조선과 일본에서 사용된 정신대의 용례와 그 변천과정을 검토하면서 조직적인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본격화된 1938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위안부’ 동원이 정신대라는 용어의 활용 속에서 이루어진 배경을 검토하는 것이다. ‘위안부’ 용어의 용례와 그 변천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연구 과제를 남긴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범위에 한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sup>3)</sup>

## II. 정신대라는 말과 의미 변화

### 1. 데이신타이(挺身隊)라는 일본어

정신대는 일본어 데이신타이(挺身隊)의 한자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우리말에 ‘앞장서서 나아간다’는 뜻의 정신(挺身)이라는 말이 있기<sup>4)</sup>는 하지만, ‘혼신을 다해 나아가는 부대’의 뜻을 지닌 정신대라는 명사는 일본군에서 만든 전시(戰時) 선전 용어이다. 러일전쟁 중인 1905년 4월 13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기사 「진두총화(陣頭叢話)」에서 일본군 장교를 “정신대 대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정신대는 바로 일본군을 일컫고 있는 것이다.

3)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조선과 일본에서 사용된 정신대의 용례와 그 변천과정을 검토하면서 조직적인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본격화된 1938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위안부’ 동원이 정신대라는 용어의 활용 속에서 이루어진 배경을 검토하는 것이다. ‘위안부’ 용어의 용례와 그 변천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연구 과제를 남긴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범위에 한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4) 조선왕조실록 검색 사이트에서 정신(挺身)을 입력하면 이 단어를 포함한 목록이 500건 이상 검색된다  
<http://silok.history.go.kr/> (검색일: 2020.05.20).

5) 한혜인은 정신대가 러일전쟁기부터 사용된 말이라고 쓰고 있으나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한혜인, 2015, 110). 러일전쟁 이전 시기에도 사용된 말인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러일전쟁 시기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임은 틀림없다.

이후에도 일본 언론은 일본군을 꾸준히 ‘정신대’라고 묘사했다. 1922년 중국 장쑤린(張作霖)을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에서 일본 언론은 러일전쟁 때 장쑤린의 군대가 “일본군의 별동대가 되어 몽고지역에 진출해서 우리 정신대를 도운 공로는 적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썼다(『大阪時事新報』, 1922/4/28)<sup>6)</sup>. 만주사변 이후에는 관동군의 내몽고 진출 상황을 전하면서 장교의 이름을 딴 ‘가와하라 정신대(川原挺身隊)’(『朝日新聞』, 1933/3/5), ‘나가세 정신대(長瀬挺身隊)’(『朝日新聞』, 1933/3/7) 등의 일본군 부대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다. 군대를 정신대라 표기하는 것은 중일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어 일본군의 보고자료 속에서 ‘요코야마(横山)정신대’, ‘이마다(今田)정신대’ 등의 지칭이 보인다(『鐵道第二連隊第二大隊』, 1938)<sup>7)</sup>. 이러한 표현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서 1944년 11월 1일 대본영발표에서는 “우리 어뢰 정신대”라는 말을(『内務省新聞検閲係』, 1944)<sup>8)</sup>, 1945년 3월 19일 보병 제63연대 집성중대 진중일지(『陣中日誌』)에서는 “이토(伊藤)정신대 행동경과의 개요”라는 말(『歩兵63連隊集成中隊』, 1945)<sup>9)</sup>을 사용했다.

군대를 지칭하며 멸사봉공의 정신과 애국을 강조하는 정신대라는 말은 점차 민간에도 사용되었다. 1933년 11월에는 구국사이타마청년정신대 사건(救國埼玉挺身隊事件)이 일어났다. 다쿠쇼쿠(拓殖)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우익정치결사단체를 조직하고 군장교의 지원 하에 집권당(입헌정우회)의 총재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読売新聞』, 1934/04/01; 『読売新聞』, 1934/05/29; 『読売新聞』, 1934/07/12)<sup>10)</sup>.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간단체였지만, 정당과 ‘애국’을 경쟁하는 정치단체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학술과 경제, 교육 영역에서 ‘학술 정신대’<sup>11)</sup>, ‘무역

6) 『오사카지진신보(大阪時事新報)』는 고베대학경제경영연구소 신문기사문고(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 新聞記事文庫)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www.lib.kobe-u.ac.jp/sinbun> (검색일: 2020.04.20.).

7) “3. 요코야마 정신대의 점령. 5월 14일 요코야마 소대(소대장 이하 57명은 큰 임무를 맡아 엔저우(兎州)를 출발하여 단거리 열차를 타고 지닝(濟寧)에 도착했다……. 정신대는 늦게 않게 17일 오전 5시 저우자이(周寨)를 출발하여 일찌감치 오후 1시 탕자이(唐寨)를 점령하고 있는 이마다(今田)정신대(전차대)와 합류한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C11111426100). <https://www.jacar.archives.go.jp> (검색일: 2020.04.20.).

8) “여섯 수송선을 격침 파괴, 우리 어뢰 정신대 분전. 대본영발표 1944년 11월 1일 16시” 아시아역사자료센터(A06030107600) <https://www.jacar.archives.go.jp> (검색일: 2020.04.20.).

9) 아시아역사자료센터(C13071641400) <https://www.jacar.archives.go.jp> (검색일: 2020.04.20.).

10) 1933년 11월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후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11) “지중해 고생물반 일행은 교외 2리 왕자덴(王家店)에 있는 유명한 어류의 화석채집지에 향했다. 이날 토지헌병대, 영사관 관계자 및 공병대의 참가를 얻어 일행 30여명은 승마대를 조직하고 사나운 몽고말의 말머리를 늘어놓고 산과 들을 횡단하며 나아간 광경은 마치 학술 ‘정신대’가 과학의 전선(戰線)에 나서는 씩씩한 행군이였다” (『大阪朝日新聞』, 1933/08/21). 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 新聞記事文庫 <http://www.lib.kobe-u.ac.jp/sinbun> (검색일: 2020.04.20.).

정신대<sup>12)</sup>, ‘소년 외교 정신대’<sup>13)</sup> 같은 명칭도 생겨났다. 정부나 우익단체의 지원을 받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곧 애국하는 조직을 정신대라는 별명(別名)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대는 애국으로 정진하는 조직이라는 뜻으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헌신을 미화하는 말이었다. 1930년대부터는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도 정신대라는 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로 일본의 정치외교 관계를 소개하는 기사 속에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신대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이었다. 다음은 조선에서 발간된 각 신문들이 중일전쟁 이전 정신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다. 말 의미의 경향을 염두에 두면서 성격이 다른 사건 기사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표 1〉 중일전쟁 이전 조선 발간 신문들의 정신대 관련 기사 목록

연번	정신대라는 말이 들어간 기사 제목	신문명, 날짜
1	가와하라(川原)정신대 란핑(濔平) 점거	『매일신보』1933/3/7
2	나가세(長瀬)정신대 진격으로 구베이커우(古北口)를 드디어(遂) 점령	『중앙일보』1933/3/9
3	중국군 정신대 편성	『동아일보』1933/3/23
4	스즈키(鈴木) 정우 총재 이하 중신대관 암살음모, 금일 개재 금지 해제, 구국 사이타마(埼玉)청년정신대 사건, 전율할 계획의 내용	『매일신보』1934/4/1
5	방류회 지도자는 현역 육군중위, 급진파와 온건파 양파로 분열, 직접파 정신대 조직	『조선일보』1934/4/1
6	산업 경정의 성전, 남면의 부인정신대에 개가(産業更正の聖戰 南棉の婦人挺身隊に凱歌)	『京城日報』1935/8/21
7	용감한 에디오피아(에國) 정신대 이탈리아(伊) 수비대 전초를 돌파	『조선중앙일보』1935/10/6
8	정부군 군용기 3대, 반군요지를 폭격, 산 세바스찬 방면에 향하여 반군 총공격 준비, 정신대에 목사도 참가	『조선일보』1936/8/27
9	풍전등화의 3천 생령(生靈) 「구호정신대 급 출동 세토(瀬戸) 경찰부장이 인솔하여」 해금강 일대의 위기	『매일신보』1936/8/31
10	흥룡 강원도의 정신대, 명량한 갱생진군(興隆江原道の挺身隊 朗かな“更生進軍”)	『釜山日報』1936/7/23
11	자성(慈城) 서원(署員) 5씨에 경찰관 공훈장, 해산(海山) 적 격멸 정신대	『매일신보』1937/3/27

〈표-1〉의 1번, 2번, 4번, 5번의 기사는 앞의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3번, 7번, 8번의 기사 또한 일본 언론에 흔히 나오는 대로 외국의 군대를 정신대로 표현한 것이다.

12) “각국 자본의 대립행장이 격화되어감에 따라 관세의 방벽은 배로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각종 상품의 염가매매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무역 ‘정신대’인 면모를 지키고 있는 셈이지만 이 좋은 사례를 최근 다렌을 중심으로 하는 북중국을 향한 정크 무역에서 본다.” (『大阪時事新聞』 1933/11/28). 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 新聞記事文庫 <http://www.lib.kobe-u.ac.jp/sinbun> (검색일: 2020.04.20.).

13) 우익교육단체인 동아동문회가 선발한 소년 10명이 중국에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외교정신대’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다(『朝日新聞』, 1934/04/15.).

6번과 9번, 10번, 11번의 기사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생겨난 조직이나 사건과 관련해서 정신대라는 말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6번과 10번은 식민지 조선에서 발간된 일본어 신문인 경성일보와 부산일보의 기사이다. 6번은 남면북양의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을 선전하면서 목화 재배에 몰두하고 있는 경남지역 여성들을 ‘부인정신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전(聖戰)’을 수행하는 군대에 빗댄 표현이다. 10번 역시 조선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인 농가개생계획을 선전하면서 ‘중심인물’의 역할을 정신대라고 표현했다. 1930년대 일본 내에서는 흔하게 쓰인 ‘애국하는 조직 내의 개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정신대라는 말을 사용하여 국가시책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 신문 기자의 언어 선택으로 보인다.

9번과 11번은 조선총독부의 한글 기관지 신문인 매일신보의 기사이다. 정신대가 모두 경찰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폭우 피해를 입은 마을을 구호한 강원도 경찰부(9번)와 국경 경비를 맡아 ‘적 7명’을 토벌한 평북 자성 경찰서원(11번)을 칭찬하는 기사이다. 일본군이나 외국군을 정신대라고 표현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 내의 경찰조직 또한 정신대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 2. 총동원체제와 조선총독부의 정신대 동원

조선 내의 언론에서는 1930년대부터 정신대라는 말이 등장하여 일본군, 외국군, 경찰, 조선총독부의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노동조직 등을 가리켰다. 군대를 가리키는 정신대라는 말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조선의 언론에 지속적으로 등장했다(『매일신보』1937/8/29; 『매일신보』1937/9/19; 『매일신보』1945/6/24). 그러나 총동원체제가 이전까지 정신대라는 말은 조선인들에게는 낯선 말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신문의 정치외교 면을 꼼꼼히 살피거나 일본어 신문을 읽는 계층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중일전쟁에 따른 총동원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인들은 일상 속에서 정신대라는 말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협력을 위해 조선인들로 조직된 최초의 정신대는 1938년 5월 21일 전남 담양신사에서 조직된 애국정신대였다.

전남 담양군에서는 동양평화확립의 성전을 기념하고 또한 물자절약과 자원 애호에 일층 노력함으로써 총후의 직함을 굳게 한다는 의미로 군 당국의 지휘를 받아 애국정신대라는 듣기만 하여도 힘찬 애국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황무지의 개간과 전답의 경작, 도로 수축 등 공공사업을 위한 것으로 매월 1일과 6일의 애국일을 기하여 일제 활동을 개시하며 월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애국정신대는 조선서는 처음 되는 체계 있는 단체라 한다(『매일신보』 1938/6/2)<sup>14)</sup>

담양군민 13,000명을 대상으로 조직된 애국정신대는 ‘총후’, 곧 후방의 전쟁협력을 목적으로 군 당국의 지휘 하에 결성되었다. 이름에서 보듯이 ‘애국’이 강조되는 단체였으며 자발성에 기초를 둔 조직인 만큼 임금을 받는 노동이 아니라 ‘근로’로서 ‘보국(報國)’하는 단체였다<sup>15)</sup> 동시에 정신대와 함께 ‘근로보국대’(『매일신보』 1938/6/14; 『매일신보』 1938/6/22; 1938/6/25; 『매일신보』 1938/6/25; 『매일신보』 1938/7/1)<sup>16)</sup> ‘봉사대’(『매일신보』 1938/6/24; 『매일신보』 1938/7/2; 『매일신보』 1938/8/5)라는 이름으로 노동력 동원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들 용어는 특정한 단체 이름의 일부로, 또는 단체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보통명사로 서로 넘나들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기에 정신대는 노동력 동원 조직뿐만 아니라 ‘인술(仁術)정신대’(『매일신보』 1940/11/2)나 ‘국어보급정신대’(『매일신보』 1940/12/18)처럼 ‘애국’을 실천하는 조직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전쟁협력을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추진하면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1940년 10월 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말단 단위인 애국반을 정신대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 정신대의 땀흘린

조선의 청년은 매우 의기에 불타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와 같이 청년단 기타 단체가 있지만 나는 이것을 국민정신총동원운동으로 돌

14) 여순주는 정신대라는 명목의 조직이 시작된 것은 1940년 11월 함남 함흥에서 농촌정신대를 조직하여 국책공사에 동원한 것이고(여순주, 1994, 2), 강만길은 1941년 2월 함남에서 농촌정신대를 편성하여 각 군별로 훈련을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강만길, 1997, 13). 이들 연구는 후속 연구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정신대 용어와 역사적 성격을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자료 검색이 가능한 현재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에서 정신대가 처음 조직된 시기는 총동원체제가 시작된 직후인 1938년 5월이다.

15) 후속 보도로서 담양군 고서면의 여성들이 산덕(山德)부인정신대를 조직하고 “근로보국에 매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매일신보』 1938/9/1).

16)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의 사상 및 노동력 동원단체는 1938년에 가장 많이 조직되었다.

아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양양에 힘쓰고 있다. 앞에서 말한 지방연맹, 애국반은 정동운동의 종(縱)의 연계이지만 한편 청년단, 사상단체, 도는 관공서 등에 의한 단체를 주체로 하는 횡(橫)의 연계가 있다. 조직은 좌우로 있지만 이것을 정말로 애국적으로 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국반의 지도자 그 사람의 활동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지도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진정으로 단련된 총량하고 모범적인 자인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착안 하에 지원병 제도에 의해 군대에 갔다 돌아오는 것을 이에 맞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술선해서 애국반을 지도하고 애국운동에 다하는 것을 바꿔 말해, 이름 붙여 정신대라고 하고 제복 위에 리본을 달고 있다.**

정신대는 이미 엄격한 군대교육을 받은 자나 8만 5천의 지원병을 지원한 미복(未服)의 우수한 자들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 청년훈련소(이를 위해 종래 200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을 1,800개소로 증설)에서 정신 육체가 모두 맹렬한 훈련을 받은 자이다. 제제도 하고 산간에 가서 격렬한 운동에도 따른다. 독일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욱 맹렬한 것이라는 지도자에 의한 세포조직이 정말로 굳어 간다면 그야말로 전 조선 2,300만 명이 철과 같이 강하게 단단해져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절대로 미동도 없다. 이 점을 잘 주목해주었으면 한다 [강조: 필자]. (南總督, 1940).

1940년 10월 미나미(南) 총독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방법으로서 군대훈련을 받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단련된 총량하고 모범적인 자’를 애국반의 지도자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복에 리본 표식을 한 지도자의 지도하에 애국반이 ‘애국운동’을 다하는 것을 정신대라고 한다고 했다. 애국반이 민가 10호 단위로 조직됐음(『매일신보』1938/7/20)을 떠올리면, 한 마을에 여러 개의 정신대가 존재한 셈이 된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국민총력운동)의 범주 하에서 각 마을의 사상이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정신대 조직들이 다양하게 생겨났다. 1941년 2월 함경남도는 공사장에 출동시킬 1천대의 농촌산업보국대의 결성 계획을 세웠으며, 매일신보는 이 사실을 ‘농산촌의 보국정신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매일신보』1941/2/21). 조선총독부는 1939년부터 ‘농촌부녀자들의 계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 군에 여자지도원을 한 사람씩 두기 시작했고, 1941년부터는 국민총력조선연맹에 부인부(婦人部)를 창설하고 지도원 220명을 임명하여 “부인지도에 정신대로 활동”시켰다. 그리고 1942년부터 각 군에 지도원 두 사람씩 배치할 것을 예고하였다(『매일신보』1941/2/22).

‘애국’을 위한 동원조직을 뜻하는 정신대라는 말은, 1938년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기에 들어와 일상 속의 선전용어로서, 실질적인 동원조직으로 등장하면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흔하게 접하는 말이 되었다. 국어라 불린 일본어의 습득, 전염병 예방 활동(『매일신보』1941/3/29), 저축 장려(『매일신보』1941/12/4) 활동에 관여된 단체를 정신대라 불렀으며, ‘근로보국’이라는 명분의 노동력 동원단체가 보국대, 봉사대라는 명칭과 더불어 정신대라고 범칭되었으며, 애국반 지도원에 의한 조선인들의 ‘애국활동’ 전반을 정신대라고 불렀다. 정신대의 조직대상에는 남성, 여성, 학생, 청년 모두 포함되었다.

정신대는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초한 전쟁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여기서 이탈하면 ‘비국민’의 낙인이 찍히고 강제징발의 대상이 된다는 경고가 있었다<sup>17)</sup>.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방침이 조선의 각 지역에서 애국반 지도원의 입으로 전달됐을 때 그 현장에 어떠한 태도와 감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다. 정신대라는 기표(記標)는 공권력에 의해 ‘자발적 협력’으로 선전되었지만, 식민지민들에게 정신대는 ‘강요된 동원’ 또는 ‘거부하면 불이익과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되었던 것이다.

### III.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 1. 총동원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여성동원:

##### 정신대, 여자(근로)정신대

여자근로정신대, 또는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가 여성 노동력 동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1943년 10월부터이다. 광공국장 시오다 마사시로(塩田正洪)는 그 이전의 여성동원은 “관청에서 노동을 장려했던 여자추진대와 국민근로협력령에 의한 근로보국대”가 담당했다고 밝혔다(『매일신보』1944/8/26).

여자추진대는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총후활동’, 곧 후방의 전쟁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조직으로 20세에서 30세 사이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심신이 건전한 중견여자”들로 선발하여 각 읍면 단위로 편성한 것이었다(『매일

17)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전 애국반원에 외쳐 지금까지 구탈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생활양식을 뜯어 고쳐서 전시에 알맞도록 새 생활양식을 확립 실천하여 국책완수에 몸을 던지자고 이달부터 힘찬 발足を 하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애국반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비국민’은 “경찰의 손을 빌어 강제노동을 시키려는 제2단의 안(案)”을 세웠다고 하였다(『매일신보』1941/8/5).



신보』1942/8/2). 국민근로보국협력령에 의한 근로보국대는 1938년부터 조직해 온 근로보국대를 더욱 구체화, 체계화하여 노동력 동원 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1941년 9월부터 국민개로운동(國民皆勞運動)의 실천조직으로 시작되었으며(김윤미, 2008, 127),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은 1941년 11월 22일 공포,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의 근로보국대가 만 20세에서 4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30일 동원을 목적으로 했다면 국민개로운동 하의 근로보국대는 만 14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만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여자’를 대상으로 1년 중 30일 이내(10일 초과 가능)에 동원할 수 있었다(『매일신보』1941/11/23). 근로보국대 동원을 위해 부읍면은 협력가능인원을 조사하여 매년 1월 말부터 2월 15일까지 부읍, 군수 또는 도사(島司)에게 보고하고, 이들은 다시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다시 2월말까지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김윤미, 2008, 133). 이에 따라 1941년 9월부터 애국반 단위의 만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여자’ 조사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8)</sup>. 애국반의 조사 활동은 정신대의 활동으로 인식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여성 노동력 동원정책에서 미혼 여성이 대상이 된 것은 양치현모주의 기조 하에 후방의 ‘모성보호와 이에(家)제도의 유지’라는 국가의 여성정책과 균형을 고려한 것이었다. 일본의 여성이나 식민지 여성을 막론하고 일본의 여성 노동력 동원정책은 남성의 군 동원이나 노동 동원에 의해 공백이 생긴 노동현장을 메우려는 소극적인 것이었다(外村大, 2006, 748-749). 일제는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낳는 ‘가정부인’을 제 몫의 일을 하는 자라고 인식했으며, ‘미혼여자’는 놀고 있는 노동력, 곧 ‘유희(遊休)노동력’에 포함되었다고 보았다(『매일신보』1943/7/17).

일본의 본격적인 여성 노동력 동원정책은 1943년 들어와 시작되었다. 1943년 1월 20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생산력증강긴급대책요강〉을 정하여 여자근로동원의 강화를 결정했고, 9월 13일 차관회의에서 〈여자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건〉을 정해 여성 동원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만 14세 이상 미혼자나 신규학교 졸업자 또는 불요불급 학교 재적자 등이 1년에서 2년간 노동에 종사하고 도청부현의 지도 하에 시구정촌장(市區町

18)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전 애국반원에 외쳐 지금까지 구탈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생활양식을 뜯어 고쳐서 전시에 알맞도록 새 생활양식을 확립 실천하여 국책완수에 몸을 던지자고 이달부터 힘찬 발족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애국반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비국민’은 “경찰의 손을 빌어 강제노동을 시키려는 제2단의 안(案)”을 세웠다고 하였다(『매일신보』1941/8/5).

村長), 정내회(町內會), 부락회, 주민조직(隣組), 부인회, 학교장 등이 동원을 담당하도록 했다<sup>19)</sup>. 일본지역에서는 1943년 10월경부터 여자근로정신대가 조직되기 시작했다(김미현, 2008, 15).

조선총독부는 1943년 10월 8일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을 결정하고 신규학교 졸업자 및 14세 이상 미혼자 등의 전면적인 동원 체제를 확립하였다. 기록상 조선에서는 1944년 3월과 4월에 평양여자근로정신대를 조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계속해서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지역에서 여자근로정신대를 조직하여 일본 후지코시(不二越)나 미즈비시(三菱) 등의 공장에 동원한다(여순주, 1994, 52; 山田昭次, 2005, 150-151). 그리고 1944년 8월 22일 일본에서 칙령 제519호로 제정한 <여자정신근로령>을 일본과 조선, 타이완에서 동시에 공포, 즉일 시행하여 뒤늦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타이쿠히코(秦郁彦)는 1944년 10월에 발간된 『국민징용의 해설』을 인용하며 조선여자에 대해서는 국민징용령이나 여자정신근로령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여성은 ‘강제연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제연행’이란 ‘징용령’에 기초한 일본 등의 ‘노동력 이입’을 뜻한다는 것이다(秦郁彦, 1999, 367).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이 책은 조선총독부 광공국 노무과가 작성했다는 하타 이쿠히코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총력조선연맹이 발간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광공국 노무과는 감수를 했다. 조선 여성 동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여자 징용은 실시됩니까.

답: 여자에 대해서는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본부의 방침입니다.

문: 여자정신근로령이라는 법령이 앞서 공포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본년 8월 22일자로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은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국민의 근로협력에 관한 칙령으로서 종래 내지[内地, 일본: 필자]에서는 실시해오던 여자정신대의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상은 국민등록자인 여자입니다. 즉 내지에서는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자입니다. 조선에서는 특수 기술노동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여자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서 현재 즉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출동기간은 대개 1년입니다. 출동방법은 지방장관이

19) 일본 정부의 여성 노동력 동원정책 전개사상은 山田昭次, 2005, 148-149 참조.

시정촌장, 기타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해 대원의 선발을 명령하고 그 결과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지방장관은 그 보고에 따라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정신 근로령서를 교부합니다. 출동은 대(隊) 조직에 의한 것입니다.

문: 금후 조선에서 여자정신근로령은 내지와 같이 될 방침입니까.

답: **여자정신근로령은 조선에서도 실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조선에서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일반 여자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자는 국민등록의 요신고서인 여자 13종의 기능자인 기술자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매우 근소합니다. **금후에도 여자를 동원하는 경우, 여자정신근로령 발동에 의한다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조선의 여자정신대는 모두 관의 지도알선에 의한 것으로 내지의 가장 근로관리가 훌륭한, 시설이 정비된 비행기공장 등에 나갑니다. (중략) 전국(戰國)의 추이에 따라서는 **여자동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그 각오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강조 필자] (國民總力朝鮮聯盟 編, 1944, 64-66).

조선인들의 여성동원 인식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이 펴낸 위의 책의 내용은 중요하다. 국민총력조선연맹 하의 조직들이 조선인들을 직접 만나 동원 대상을 정하고 동원절차를 진행하는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조직되어 동원되고 있고 뒤늦게 법적 근거가 뒷받침된 여자정신근로대에 대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설명은 애매하다. 여자정신근로령은 조선에도 실시되고 있지만 여기에 적용되는 조선여자는 적기 때문에 관의 지도알선에 의해 조선여자정신근로대를 조직할 것이며, 여자동원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테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으라는 내용이다. 조선총독부 광공국장인 시오다는 『매일신보』와의 문답에서 일본의 여자정신근로령을 “조선에도 같이 실시한다”고 말한 바 있었다(『매일신보』 1944/8/26).

이처럼 1943년 들어와 여자근로정신대의 조직과 관의 알선, 관련 법령 공포, 정신대라고도 통용된 애국반의 조사에 따라 여자정신대를 동원한다는 말들이 구성되고 전해졌다. 일본에서 1942년 1월에 ‘육군여자정신대’라는 말이 사용<sup>20)</sup> 된 적이 있지만, 여성노동동원이 강화된 1943년 이후 여자정신대는 주로 여자근로정신대의 약칭이었다. 동시에 1938년 이후 일상에

20) 1942년 1월 21일 일본 도쿄 소재 육군피복본창(陸軍被服本廠)에 입소한 600여명의 여성들을 ‘육군여자정신대’라 불렀다. 이들은 군속대우를 받았다고 한다.(內閣情報局 編, 1942, 20)[아시아역사자료센터 (A06031080100) <https://www.jacar.archives.go.jp>. (검색일: 2020.05.10.)]

서 익숙해진 정신대라는 말도 섞여 사용되었다. 정신대에서 여자(근로)정신대의 변화는 공권력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된 여성동원의 의미였다. 이 시기 ‘애국을 위한 정신대 동원’이라는 명명 앞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동의’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 2.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서사 형성

‘위안부’는 민간에는 은폐된 용어였다.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것은 제2차 상하이 사변이 일어난 1937년 8월부터였고 1938년 3월 4일 육군성 부관이 통첩을 내려 ‘위안부’ 모집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하였다. 곧 ‘위안소 종업부’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하여 담당자의 선정을 주도적절하게 하고, 그 실제 지역에서 관계 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군의 위신을 지키고 사회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陸軍省副官發北支那方面軍及中支派遣軍參謀長宛通達, 1938). 나가이 카즈(永井和)는 이 부관통첩이 나온 배경으로서 1938년 1월과 2월 사이 생산된 ‘위안부’ 모집과 관계된 경찰문서들을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군의 위신을 지키고 사회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경찰내부에서 ‘위안부 모집과 도항을 합법화하되 군과 위안소의 관계를 은폐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혀냈다(永井和, 2000, 5).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공권력의 ‘공인과 은폐’라는 이중적인 태도 속에서 시행되었고, 전선이 확대되면서 ‘위안부’의 동원도 늘어났다. 1938년 가을, 상하이의 육군은 3,000명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고(永井和, 2000, 13-15), 1941년 일본군은 만주와 소련의 국경지대에서 관동군특종연습이 끝난 직후에 조선인 여성 2,000명을 모집했다(綏陽國境警察隊寒葱河隊長, 1941). 1942년 9월 30일 육군성 인사국 은상과장(恩賞課長)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장교 이하 위안시설을 400개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으며(金原節三, 1942)<sup>21)</sup>, 1942년 7월에는 ‘제4차위안단’의 일원으로 조선인 여성 703명이(안병직, 2013, 21-27), 1943년 7월에는 ‘남방 파견대’라는 명목으로 조선인 여성 300명이(OSS, 1945) 싱가포르를 향해 출발했다. ‘제4차위안단’에 포함됐던 위안소 업자 기타무라 에이븐은 조선

21) 회의에 참석하여 이 내용을 기록한 긴바라 세츠조(金原節三)는 육군성 의무국(醫務局) 의사과장(醫事課長)이었다.

군사령부의 의뢰로 ‘위안부’ 모집 허가권을 얻었으며, 조선인 여성 22명을 ‘구매하여(purchased)’ 싱가포르를 거쳐 버마로 갔다고 했다. 더불어 그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모든 일본군 사령부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조선군사령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SEATIC, 1944).

여성들을 ‘구매했다’는 표현에서 ‘위안부’ 동원에 인신매매 방식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일본이 정치적 지배력을 미치는 지역에서 시행된 공창제(公娼制)의 범위에서 구조화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식민지화와 더불어 공창제가 시행되었으며, 여성을 감언이설이나 취업사기 등으로 속여 매매를 하고 이득을 취하는 접객업자, 소개업자, 브로커, 문서위조업자 등의 블랙마켓이 형성되어 있었다. 공창제 하에서 서류의 요건이 갖춰지는 한 여성매매는 ‘합법’의 범주 안에서 자주 독해되었다.

총동원체제가 정신대라는 이름의 갖가지 전시 동원이 자행되고 ‘미혼 여성’ 대상의 근로보국대, 여자정신대 등 동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던 시기 ‘돈 벌이’를 빌미로 사라지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일본이나 만주의 군수공장 여공이나 ‘종군간호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듣고 따라갔는데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주로 ‘처녀들’이고 전쟁터에서 군대의 빨래를 하거나 피를 뽑히거나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밤에는 군인의 위안을 해야 한다는 말도 뒤따랐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말들이 치안을 어지럽히는 유언비어일 뿐이라며 육군형법 위반죄 또는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죄 등으로 처벌했지만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박정애, 2019, 71). 나아가 1940년대 들어와 부락마다 처녀를 공출하여 전선에 보낸다는 식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sup>22)</sup>.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정신대는 한편 ‘처녀공출’을 의미하기도 했고 ‘전쟁터에 끌려가 여성으로서 고초를 겪는 것’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신대 동원과 법적 배경 차이나 성격 차이는 달랐어도, 그 차이가 조선인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지 않은 여자(근로)정신대 동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던 1944년 초에 조선인들은 “조혼을 한다거나 피신을 하는 따위”(『매일신보』, 1944/5/19)로 대응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 세토(瀬戸) 경기도지사는 조선여성들이 시국인식이 부족하고 근로정신이 없기

22) 1941년 5월 경북 지역의 하차기는 각 면에서 남녀별로 청년대를 조직하자 “최근 당국에서 17,8세의 미혼처녀를 모집하여 북만주에 연행하여 전쟁 중인 일본군 장병을 위해 취소 또는 위안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가 육군형법 위반죄로 처벌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판결문』, 1941/8/11), 1943년 5월 경북선산의 길본가우는 “이웃부락의 처녀 3명이 공출되어 붉은 종이 1장이 오면 만주로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가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죄로 처벌되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판결문』, 1943/7/30).

때문이라고 민족성 탓을 하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1938년부터 ‘정신대 동원’이라는 언설 속에서 전쟁터에 보내지는 여성들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조선 여성들은 일본의 여성과 달리 ‘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 알선’의 방식으로 여자(근로)정신대가 조직된다는 방침이 전해졌을 때, 조선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공권력의 여성동원 방침에 공포와 저항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달리 조선의 여성들이 대부분 ‘국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배경도 따지고 보면, 조선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특히 여성에 대한 제도교육, 기술교육 등에 인색했던 식민지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식민지 여성들은 민족, 성, 계급의 중층의 차별구조 위에 놓여있었고, 총동원체제기를 맞아 유래 없이 공권력의 전시동원 대상으로 포착되었다. 동시기 ‘위안부’ 모집업자는 자신의 진짜 의도는 숨긴 채 조선인 여성에게 접근해서 각종 감언이설을 늘어놓든가 ‘시국’을 들먹이며 위협을 하기도 했다. 이때에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 또는 구장이 동행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 또한 모집업자의 말에 속았거나 혹은 동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23)</sup>.

경남 양산의 김복동은 1941년 동네 구장이 나라를 위해 데이신타이에 가야 한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중국 광둥의 위안소로 보내졌다. 어머니가 데이신타이가 뭐냐고 했을 때, 구장이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김복동 구술, 정진성 정리, 1997, 85)이라고 했다. 1945년 전남 승주의 이남님 또한 정신대로 뽑혔다는 구장의 말에 버마의 위안소로 보내졌다. 구장은 정신대가 군인들의 밥과 빨래를 하거나 군복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며 전쟁 덕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이남님, 1982, 104). 1942년에 버마의 위안소로 동원된 이용녀는 싱가포르로 가는 배 안에서 ‘위안부’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위안부’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다(이용녀 구술, 고혜정 정리, 1993, 218).

전쟁터의 위안소를 드나들었던 일본군 병사들도 ‘정신대로 끌려와서 위안부가 된’ 조선인 여성들을 만났다. 1942년 10월에 라바울에서 하사관 용의 위안소에 갔던 해군중위 츠노다 가즈오(角田和男)는 그곳에서 와카마루(若丸)라고 불리는 조선인 ‘위안부’를 만났다. 그녀는 동료들의 대부

23) 정신대와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애국반과 애국반 지도자, 그리고 이장 또는 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위안부’ 동원 구조를 밝히기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분이 처음에 여자근로정신대로 징용되어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 내지의 군수공장으로 갈지, 전선(戰線)의 ‘위안부’로 갈지 희망을 물었고, 차 심부름이나 식사와 세탁을 돕는 일 정도로 생각하고 ‘전선’을 희망했다고 한다. 라바올로 향하는 배 안에서 비로소 ‘위안부’ 일의 설명을 듣고 놀랐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岩波嶺雄, 2002, 41). 또한 군의관 가와카미 코시로(川上光四郎)는 1944년 무렵 산시성(山西省) 안이(安邑)의 위안소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보았다. 어쩌서 고향을 멀리 떠나 북중국까지 온 것일까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치료를 하러 온 한 여성에게 물어보았다. ‘위안부’ 대부분이 마을의 유력자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군 사무 일을 하는 군속으로 가지 않겠냐고 권유를 받았고, 그녀는 여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응했다고 대답했다. 그 외에는 황군위문특별여자정신대로서 현지의 군을 위해, 국가를 위해 반드시 응모해야 한다고 들어서 군속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고 했다. 그 뒤에는 강제적으로 경찰관이 끌어내어 온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川上光四郎, 2003, 106).

한편 전쟁터에서 발견된 ‘위안부’들을 포로로 심문했던 미군도 ‘위안부’ 문제를 ‘정신대 동원’과 관련하여 이해했다. 알렉스 요리치(Alex Yorichi)는 1944년 8월 10일 버마 미치나에서 생포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심문하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 기록을 남겼다.

1942년 5월 초, 일본인 업자들이 일본군 업자들이 새롭게 정복한 동남아시아 영토에서 “위안 접객”을 할 조선 여성을 징모 할(enlisting) 목적으로 조선에 도착했다. 이 “접객”의 성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한 부상병을 방문하여 봉대를 감는 등 주로 군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과 관련된 일로 여겨졌다. 이 업자들이 이용한 유인책은 상당한 수입, 가계 빚을 갚을 기회, 손쉬운 일, 그리고 신천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전망이었다. 이러한 사기에 속아 많은 여성들이 해외임무를 위해 징모되었고 몇 백 엔의 선불금을 받았다(OWI, 1944).

‘위안 접객’의 일이 명시되지 않은 채 군 관련 일로서 징모(enlisting)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알렉스 요리치와 함께 이 여성들은 심문했던 윈 로이첸은 뒤에 쓴 그의 책에서 “위안부들은 일본인들에 의해 여자근로정신대(Women's Volunteer Labor Corps)라고 완곡하게 불리는 것으로 조직되었다”(Won-loy Chan, 1986, 93)고 적고 있었다. ‘위안부’라는 말이 ‘여자근로정신대’라는 호칭 뒤에서 은폐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 후 위안소를 드나들었던 병사, ‘위안부’를 목격했던 동포, 정신대와 처녀공출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의 여자들이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가 되었다’는 서사를 완성했다. 1946년 5월 12일자 『서울신문』은 “일본인이 진 가장 큰 죄의 하나로서 이 땅의 딸들을 여자정신대 또는 위안부대라는 미명으로 일본은 물론 멀리 중국 남양 등지에 강제로 혹은 기만하여 보낸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썼다. 1946년 7월 18일자 『중앙신문』 또한 “우리 동포 부녀들은 소위 정신대나 위안부라는 미명 아래 왜병들의 싸움터로 끌려가 갖은 유린과 혹사를 당하고 있던 중……”이라고 썼다. 해방 직후 한국인들의 감각 하에서 정신대든, 위안부든 모두 전쟁터에 끌려간 여성들을 미화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기사들은 정신대와 위안부가 동렬의 의미를 지닌 것처럼 섞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정신대로 끌려간 남양, 중국 각 처에서 일인(日人) 장교의 위안부 노릇을 하던 한국 처녀들”(『경향신문』1962/8/14), “여자정신대라고 하는, 일군(日軍) 상대의 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한국여성”(『동아일보』1974/7/4), “종군위안부라는 말은 우리에게서 오히려『테이신타이』(정신대)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일제 강점 아래에서 한국 여성이 당해야 했던 가장 큰 수모 사건”(『동아일보』1979/9/21), “일본의 소위 전선위안부(정신대)로 끌려와 청춘을 일본병들에게 농락당한 채……”(『동아일보』1985/3/22) 등의 기사들이 그러하다.

일본의 언론도 1987년 ‘종군위안부’에 관해 설명하면서 “특히 1942년 이후 ‘여자정신대’라는 이름 아래, 한일병합으로 무리하게 일본인 취급을 받고 있던 조선반도의 딸들이 다수 강제적으로 징발되어 전장에 보내졌다”(『読売新聞』1987/8/14)고 했다.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와 관련하여 ‘여자정신대’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제도교육과 취업기회에서의 여성 배제, 종래의 가부장제를 활용한 식민지 근대 가부장제의 재편성, 식민지 공창제 하의 인신매매 매커니즘 구조, 전시체제기 이후 비로소 공권력의 정책대상으로서 소환된 식민지 여성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조선인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정신대’와 ‘위안부’가 착종된 현상은 해방 후에도 1990년대까지 공공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고 김학순의 공개증언 이후 촉발된 운동과 연구의 진전과 더불어 그 차이를 구분하게 되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2012년 제2차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역사부정을 통한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두드러졌다. 우익들은 일본에서 김학순의 증언을 처음 보도한 『아사히신문』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여자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전장으로 연행돼”라는 기사를 쓴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기자가 정신대와 위안부도 구분 못하는 날조기자라고 공격했다. 2014년 8월 5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한 기사는 오보였다고 발표했다. 여자정신대는 군수공장 등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를 가리키는 것이며 위안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은 1990년대 초 연구도 부족했고 역사발굴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의 발표 이후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의 정신대와 위안부는 서로 다른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역사부정주의자들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또한 거세지고 있다. 용어와 실체를 혼동하는 나라에서 ‘위안부’ 피해를 제대로 인식할 리 없다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생존자인 이용수가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고 언급하여 언론들이 ‘전문가들’에게 용어 자문에 들어간 2020년의 한국에서도 여전히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혼동’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정신대와 위안부 용어의 관계를 검토하는 선행연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정쟁(政爭)의 장에서는 토론의 근거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식민지기를 기억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쩌서 정신대를 위안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여성정책은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길러내어 간접적으로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는 양치현모주의 정책이었고, 이러한 기조 하에 가족제도, 교육제도를 시행하였다. 양치현모주의 정책은 총동원체제 구축 이후 ‘군국의 어머니’, ‘총후(銃後) 여성’이 되어 전쟁의 후방을 지키는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방향으로 총동원체제가 남성의 노동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성 노동력 동원 정책을 시행했다. 1943년 이후 등장한 여자(근로)정신대는 이전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정신대와 ‘혼동’되지 않은 채 여성노동력 동원조직을 가리켰다.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도 양치현모주의 여성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산층 여성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여성들은 제도

교육에서 배제된 채 관습적 가부장제와 결합한 식민지 가부장제와 빈곤한 가계의 지배 하에 있었고, 식민지 공창제 하에서 형성된 여성 인신매매 매커니즘의 희생이 되었다. 공권력과 사회권력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행한 여성차별들은 ‘민도(民度)’라는 명분의 민족차별과 연관되어 있었다. 1938년 4월 이후 총동원체제가 시작되면서 식민지 여성들은 비로소 공권력의 적극적인 동원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총동원체제와 더불어 일상으로 파고든 정신대라는 동원용어와 더불어 ‘미혼여성’ 또는 ‘처녀’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 동원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시기 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늘어난 ‘위안부’ 동원에 매진하는 모집업자들이 있었다. 근로보국대, 애국봉사대, 여자추진대 각종 동원조직들이 정신대라고 범칭되었으며, 애국반, 이장구장 등 동원조직의 협조를 얻어 마을의 비혼여성에게 접근한 ‘위안부’ 모집업자들은 ‘군수공장의 여공’, ‘종군간호부’, 또는 정신대를 내세워 감언이설이 섞인 전시 동원을 강요하였다. 1938년 이후부터 식민지민들에게 ‘여성이 정신대로 간다’는 것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여성으로서 고초를 겪는 일’을 의미했고, 1943년 이후 여자(근로)정신대 동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들어와서는 ‘미혼여자는 여자(근로)정신대가 된다’는 공권력의 방침에 커다란 공포를 느꼈다. 전쟁이 끝나고 ‘위안부’ 피해자의 처참한 현실이 한반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후 한국 사회에는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전시 여성 피해 서사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총동원체제 이후부터 종전을 거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1990년대까지 한국사회에는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은 착종되어 모두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되어 왔다. 이 때문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오해되어 또 다른 차원의 불이익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문제는 포스트 식민주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제도라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공권력에 의한 성착취 시스템에 내재된 민족과 성, 계급 차별의 문제를 찬찬히 따져봐야 정신대/위안부 착종 상황이 드러내는 식민지적 특성을 해명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쟁책임과 더불어 식민지 지배책임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조선인‘위안부’가 동원되던 시기의 식민지 및 젠더 구조가 분명해져야 조선인‘위안부’ 동원에 관한 실태와 그 성격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시기별, 지역별 피해실태를 드러내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길 (1997).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호칭 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회 엮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 강정숙 (2006). “역사용어 바로 쓰기: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역사비평』 74. 315-320.
- 경향신문 (1962). “여적”. 『경향신문』. (8월 14일).
- 대구지방법원(1941). “하차기 육군형법 위반(昭和16年刑公第909號)”.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8월 11일).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1943). “길본가우 조선임시보안령 위반(昭和18年刑公第209號)”.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 판결문』. (7월 30일).
- 김미현 (2008).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직권-2, 2008.7.25.). 서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김복동 구술. 정진성 녹취 (1997). “광둥,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전전하며”.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 서울: 한울.
- 김윤미 (2008). “총동원체제와 근로보국대를 통한 ‘국민개로’”. 『한일민족문제연구』14. 342-405.
- 동아일보 (1933). “중국군 정신대 편성”. 『동아일보』. (3월 23일).
- 동아일보 (1974). “한국인 6백만명이 동원된『태평양전쟁』”. 『동아일보』. (7월 4일).
- 동아일보 (1979). “일(日) 사회에『정신대』충격”. 『동아일보』. (9월 21일).
- 동아일보 (1985). “일본의 한국인(33), 정신대 출신 할머니의『한』”. 『동아일보』. (3월 22일).
- 매일신보 (1933). “가와하라(川原)정신대 란핑(潾平) 점거”. 『매일신보』. (3월 7일).
- 매일신보 (1934). “스즈키(鈴木) 정우 총재 이하 중신대관 암살음모, 금일 계재 금지 해제, 구국사이타마(埼玉)청년정신대 사건, 전윤희 계획의 내용”. 『매일신보』(4월 1일).
- 매일신보 (1936). “풍전동화의 3천 생명(生靈)『구호정신대 급 출동 세토(瀬戸) 경찰부장이 인솔하여』 해금강 일대의 위기”. 『매일신보』. (8월 31일).
- 매일신보 (1937). “만주군(滿軍)의 정신대, 백병전 연출”. 『매일신보』(8월 29일).
- 매일신보 (1937). “자성(慈城) 서원(署員) 5씨에 경찰관 공훈장, 해산(海山) 적 격멸 정신대”. 『매일신보』. (3월 27일).
- 매일신보 (1937). “평한선(平漢線) 차단성공, 이가라시(五十嵐) 대위 정신대 분전 주효(北平)”. 『매일신보』(9월 19일).
- 매일신보 (1938). “강원도내 각 부락에도 근로보국대를 편성, 12세 이상 40세까지의 남녀망라 봉사 작업 관념 강화”. 『매일신보』(7월 1일).
- 매일신보 (1938). “경기도 여주군에 부인보국대 탄생”. 『매일신보』(6월 22일).
- 매일신보 (1938). “공동작업하여 보수전액을 헌납, 연안농교 봉사대 미거”. 『매일신보』(6월 24일).
- 매일신보 (1938). “근로보국대를 조직코 애로(愛路)와 개간작업, 순천청년단에서 결정”. 『매일신보』(6월 25일).
- 매일신보 (1938). “민가 10호를 단위로 애국반의 세포조직,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의 유기적 기구로 중앙 지방을 통하여 일환으로”. 『매일신보』(7월 20일).

- 매일신보 (1938). “사변 1주년 기념일을 기점으로 12세부터 40까지 근로보국대로 총동원”. 『매일신보』 (6월 28일).
- 매일신보 (1938). “애국정신대 조직코 근로보국에 매진”. 『매일신보』 (9월 1일).
- 매일신보 (1938). “조국애에 총동원되는『학교근로보국대』 학교에서 가까운 농산어촌에 여름방학(夏休) 중 봉사의 구체적 내용”. 『매일신보』 (6월 14일).
- 매일신보 (1938). “청년단을 동원 노동봉사대 조직 원주군서 계획수립”. 『매일신보』 (7월 2일).
- 매일신보 (1938). “희천읍 소학생 근로봉사대”. 『매일신보』 (8월 5일).
- 매일신보 (1940). “국어보급정신대를 각 학교서 600명이 참집(參集)”. 『매일신보』 (12월 18일).
- 매일신보 (1940). “금일 만주로 인출정신대, 흑사병 방역에 조선에서 100명 출발”. 『매일신보』 (11월 2일).
- 매일신보 (1941). “1천대로 편성, 농산촌의 보국정신대”. 『매일신보』 (2월 21일).
- 매일신보 (1941). “결핵 예방의 정신대 양성”. 『매일신보』 (3월 29일).
- 매일신보 (1941). “국민근로보국협력령-금일 공포, 12월 1일부터 시행”. 『매일신보』 (11월 22일).
- 매일신보 (1941).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전문”. 『매일신보』 (11월 23일).
- 매일신보 (1941). “무위도식은 비국민, 취직도 싫다면 강제노동에 징발, 평남연맹의 신생활운동”. 『매일신보』 (8월 5일).
- 매일신보 (1941). “발족한 개로 운동, 남녀총동원 태세 정비”. 『매일신보』 (9월 22일).
- 매일신보 (1941). “여자지도원을 배가, 농촌부녀 적극 동원, 명년에는 1군 2인 배치 예정”. 『매일신보』 (2월 22일).
- 매일신보 (1941). “저축보국의 정신대, 각정 연맹 구장들 활동지침을 협정”. 『매일신보』 (12월 4일).
- 매일신보 (1942). “총력운동 별동대, 여자추진대를 조직”. 『매일신보』 (8월 2일).
- 매일신보 (1943). “부인 유희노력 총결기, 우선 미혼여자 선발 공장에 보내”. 『매일신보』 (7월 17일).
- 매일신보 (1944). “거룩한 황국여성의 손, 생산전(生産戰)에 남자와 동렬, 여자근로령 조선에도 실시”. 『매일신보』 (8월 26일).
- 매일신보 (1944). “거룩한 황국여성의 손, 생산전에 남자와 동렬, 여자근로령 조선에도 실시”. 『매일신보』 (8월 26일).
- 매일신보 (1944). “세도(瀬戸) 경기도지사 담, 남자간 뒤를 지키라, 여성도 직장에 자진협력을 요망”. 『매일신보』 (5월 19일).
- 매일신보 (1945). “장렬, 밀림전(密林戰)의 꽃, 마츠오카(松岡) 정신대 분전기(奮戰記)”. 『매일신보』 (6월 24일). 매일신보 (1938). “애국정신대, 1만 3천 대원이 시국인식예, 전남 담양군민이 결성”. 『매일신보』 (6월 2일).
- 박정애 (2015).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사학연구』 120, 167-203.
- 박정애 (2019).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동원과 성노예: 공창제 정쟁과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 『페미니즘연구』 19(2), 45-79.
- 서울신문 (1946). “일본에 의해 끌려간 조선여성들이 상해 동포들에게 구제”. 『서울신문』 (5월 12일).
- 신혜수 (1997).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활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회 엮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 안병직 (2013).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서울: 이숲.
- 여순주 (1994). “일제말기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실태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 이남남 (1982). “독점수기, 나는 일본군의 정신대였다” 『레이디경향』 (9월호), 104-107.
- 이용녀 구술, 고혜정 정리 (1993). “이제 여기서 죽는가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 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 서울: 한울.
- 정진성 (2001). “군 위안부/ 정신대의 개념에 관한 고찰”, 『사회와역사』60, 34-61.
- 정진성 (2016). 『개정판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검색일: 2020.05.20.).
- 조선일보 (1934). “방류회 지도자는 현역 육군중위. 급진파와 온건파 양파로 분열. 직접파 정신대 조직”. (4월 1일).
- 조선일보 (1936). “정부군 군용기 3대. 반군요지를 폭격. 산세바스찬 방면에 향하여 반군 총공격 준비. 정신대에 목사도 참가”. 『조선일보』, (8월 27일).
- 조선중앙일보 (1935). “용감한 에디오피아(에國)정신대 이탈리아(伊) 수비대 전초를 돌파”. 『조선중앙일보』, (10월 6일).
- 중앙신문 (1946). “위안부를 구출, 귀국한 부녀공제 권씨 현지 보고”. 『중앙신문』, (7월 18일).
- 중앙일보 (1933). “나가세(長瀬)정신대 진격으로 구베이커우(古北口)를 드디어(遂) 점령”. 『중앙일보』, (3월 9일).
- 한혜인 (2015).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역사성”. 이인선 · 황정임 · 김동식 · 강정숙 · 조윤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Ⅰ)』(2015 연구보고서-2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OSS(미국의 전략첩보국) (1945).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 (4, 28.).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2019). 『일본군‘위안부’관계 연합군 자료 Ⅱ』. 서울: 서울시, 38-57쪽에 수록.
- OWI(전시정보국) (1944). Interrogation Report No.49(Psychological Warfare Team). (10, 1.). (정진성 편 (2018). 『일본군‘위안부’관계 미국 자료 Ⅱ』. 서울: 선인, 507-522쪽에 수록).
- SEATIC(동남아시아변역심문센터) (1944). Interrogation Bulletin No.2(Psychological Warfare). (11, 30.). (정진성 편 (2018). 『일본군‘위안부’관계 미국 자료 Ⅰ』. 서울: 선인, 505-527쪽에 수록).
- Won-Loy Chan (1986). Burma: The Untold Story. California: Presidio Press.
- 京城日報 (1935). “産業更正の聖戰 南棉の婦人挺身隊に凱歌”. 『京城日報』, (8월 21일).
- 國民總力朝鮮聯盟 編 (1944). 『國民徵用の解説: 質問にこたへて一問一答式に』. 京城: 國民總力朝鮮聯盟.
- 金原節三 (1942). “金原節三業務日誌摘録 後編その5のイ”. (9월 3일).
- 南總督 (1940). “東京にて「朝鮮」を語る”. 『三千里』12(9)(10월).
- 内閣情報局 編 (1942). “お嬢さん軍属第六百十号 陸軍被服本廠の女子挺身隊”. 『写真週報』206[아시아역사자료센터(A06031080100) <https://www.jacar.archives.go.jp>. (검색일: 2020.05.10.)].
- 内務省 新聞検閲係 (1944). “昭和十九年自十一月至十二月・勤務日誌”. (11월-12월)[아시아역사자료센터(A06030107600) <https://www.jacar.archives.go.jp> (검색일: 2020.04.20.)].
- 大阪時事新報 (1922). “張作霖(六)”. 『大阪時事新報』(4월 28일)[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 新聞記事文庫 <http://www.lib.kobe-u.ac.jp/sinbun> (검색일: 2020.04.20.)].
- 大阪時事新報 (1933). “誂え向の大連 一衣帯水の北支へ”. 『大阪時事新報』 (11월 28일)[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 新聞記事文庫 <http://www.lib.kobe-u.ac.jp/sinbun> (검색일: 2020.04.20.)].
- 大阪朝日新聞 (1933). “熱河探検記”. 『大阪朝日新聞』(8월 21일)[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 新聞記事文庫 <http://www.lib.kobe-u.ac.jp/sinbun> (검색일: 2020.04.20.)].
- 読売新聞 (1934). “埼玉挺身隊事件 第1回公判開かる 紋服姿の7被告出廷”. 『読売新聞』(5월 29일).
- 読売新聞 (1934). “挺身隊 判決”. 『読売新聞』(7월 12일).
- 読売新聞 (1934). “政友会大会(川越)を機に鈴木総裁暗殺を企つ 埼玉挺身隊の陰謀”. 『読売新聞』(4월 1일).

- 読売新聞 (1987). “從軍慰安婦の実態伝える劇団夢屋第3作女子挺身隊の悲劇”. 『読売新聞』. (8月14日).
- 歩兵63連隊集成中隊 (1945). “陣中日誌資料 歩兵63連隊集成中隊 昭和20年 3月(2)” (3月)[아시아역사자료센터(C13071641400) <https://www.jacar.archives.go.jp> (검색일: 2020.04.20.)].
- 釜山日報 (1936). “興隆江原道の挺身隊, 朗かな“更生進軍””. 『釜山日報』. (7月23日).
- 山田昭次 (2005). “戦時期の皇民化教育と朝鮮女子勤労挺身隊”.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朝鮮人戦時労働動員』. 東京: 岩波書店.
- 綏陽国境警察隊寒葱河隊長 (1941). “日軍専用鮮人料理店開設に関する件”.
- 安部浩己 (2015). “国際法における性奴隷と「慰安婦」制度”. 『季刊 戦争責任研究』84. 30-42.
- 岩波嶺雄 (2002). 『生と死を凝視した26人の記録: 等身大の予科練 戦時下の青春と戦後』. 茨城: 常陽新聞社.
- 永井和 (2000). “陸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婦募集に関する一考察”. 『二十世紀研究』1.
- 外村大 (2006). “戦時下朝鮮人女子労働動員の実態”. 鈴木裕子・外村大・山下英愛 (2006).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下)』. 東京: 明石書店.
- 陸軍省副官發北支那方面軍及中支派遣軍參謀長宛通達 (1938) “軍慰安所従業婦等の募集に関する件”. (3月4日).
- 尹明淑. (2003). 『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東京: 明石書店. 최민순 옮김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 이학사.
- 朝日新聞 (1933). “川原挺身隊躍進また躍進”. 『朝日新聞』(3月5日).
- 朝日新聞 (1934). “少年外交挺身隊 選ばれた10少年支那へ留学 東亞同文会から派遣”. 『朝日新聞』(4月15日).
- 朝日新聞 (2014). “「挺身隊」との混同 当時は研究が乏しく同一視”. 『朝日新聞』(8月5日).
- 奏郁彦 (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東京: 新潮選書.
- 川上光四郎 (2003). 『戦場と青春』. 東京: デジタルパブリッシングサービス.
- 鉄道第二連隊第二大隊 (1938). “徐州会戦に於ける戦闘及作業詳報” (5月11日-7月7日)[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1111426100). <https://www.jacar.archives.go.jp> (검색일: 2020.04.20.)].

## 「총동원체제와 조선인‘위안부’의 동원: 정신대와 위안부 개념의 착종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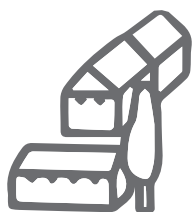
황 병 주 (국사편찬위원회)

1. 위 논문은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정신대와 위안부 용어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특히 정신대 용어 사용에 대해 자세한 실증이 이루어져 그간의 혼란을 불식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용어의 착종 현상의 역사적 함의를 추적하여 문제화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많은 시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자는 위 논문 논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2. 먼저 ‘성노예’ 개념에 대한 부분이다. 위 논문에서는 성노예 개념의 구성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개념을 부정하는 입장도 소개하고 있는데, 위안부 생활을 했던 당사자들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 중 일부는 이 용어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거부감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를 노예로 호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성립된 용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강하게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3. 일본의 정신대 용례에 있어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경우를 구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발표문에 나온대로 애초 일본에서 정신대는 ‘혼신을 다해 나아가는 부대’라는 보통명사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즉 고유한 대상을 갖지 않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시총동원체제기로 접어들면서 여자근로정신대처럼 고유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양자의 구분을 통해 일제의 전시 동원체제의 변화를 읽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즉 보통명사 단계에서 간접적 방식으로 선전을 통한 동원이 진행되었다면 고유명사 단계에서는 직접 신체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은 아닌가 한다.

4. 관련하여 정신대와 위안부 두 용어가 착종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착종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일제 지배체제의 은폐된 동원 매커니즘이다. 구체적 내용을 사상하거나 왜곡시키면서 위안부를 동원하고





자 했기에 정확한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힘들었다. 군과 위안소 제도의 관계를 숨기려는 의도에서 드러나듯이 일본은 위안소 제도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겠다.

두 번째 차원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동원체제의 구체적 실상과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했기에 혼동이 초래된 측면이다. 이는 첫 번째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또한 독자적 의미가 있다. 지배질서의 언어를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고 비틀고 따져 물으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재구성해내는 차원이다.

착종이 벌어지는 시공간도 문제가 된다. 군과 총독부 등 일제 지배체제 내부는 착종의 주된 시공간이 아닐 것이다. 착종의 주 무대는 피지배자들의 시공간이다. 또한 식민지 시기의 착종과 해방 이후의 착종도 구분해 그 차이를 따져볼 필요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에서 착종의 다른 측면은 없는지도 궁금하다.

착종의 두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정보 부족에 따른 단순한 수동적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부족과 관련되지만 더 크게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능동적 착종의 경우이다.

예컨대 1950년 시행된 농지개혁의 경우 경기도와 충청도의 많은 농민들은 그것을 여운형의 업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정보부족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운형은 1947년에 암살되었고 농지개혁은 1950년에 시행되었으니 죽은 자에 의한 정책이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농민들이 죽은 여운형이 농지개혁을 한 것처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농민은 착종을 당한 수동적 주체라기보다 착종을 감행한 능동적 주체에 가깝다.

5. 정신대와 위안부의 착종은 역사적 현실이지만 또한 역사적으로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 한다. 농지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착종을 역사적 현실로 인정하고 그 함의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지개혁 실시가 실제로 여운형의 업적으로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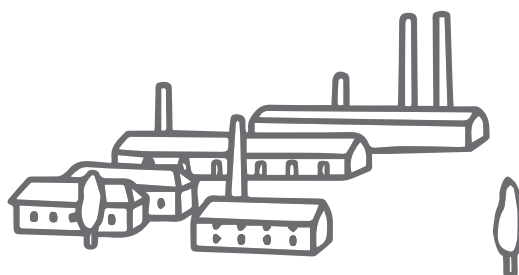
# 강제동원·강제노동 부정론에 대한 종합적 비판

- 이우연의 주장을 중심으로

김민철 (경희대학교)

- I. 머리말
- II. 식민주의와 민족차별 체계
- III. 강제동원·강제노동의  
‘강제성’ 문제
- IV. 맺음말

목  
차





# 강제동원 · 강제노동 부정론에 대한 종합적 비판

- 이우연의 주장을 중심으로

김민철 (경희대학교)

## I. 머리말

최근 수년간 한국사회와 한일 국가간에 '강제동원 · 강제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일 국가간에는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을 두고 외교갈등이 역사갈등을 넘어 경제 · 안보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고, 한국사회에서는 이른바 '반일종족주의 현상'이라고까지 불리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나타났다. '반일종족주의론자'들은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며, 심지어 국제무대에까지 진출해 한국사회를 거짓말하는 국가로 비난한다. 부정과 혐오의 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현상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하나의 신호임에 분명하다.

이 글은 『반일종족주의』<sup>1)</sup>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인 강제동원 · 강제노동 부정론(이하 강제노동부정론이라 함)에 초점을 두고 종합적인 비판을 하고자 한다.<sup>2)</sup> 강제노동 문제는 이우연이 집중해서 다루고 있고, 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한 글<sup>3)</sup>도 있어 함께 검토 대상으로 하겠다. 이우연의 주장은 ① 식민지 조선에서 제도적인 민족별 임금차별은 없었다. 임금격차는 차별이 아닌 능력차=경험의 축적 차이다, ② 강제동원은 없었고 돈 벌러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사실 새로운 게 없다. 이미 200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학계에서 역사수정주의와 논쟁을 거치면서 충분히 논박되었던 내용

1) 이영훈 외, 2019, 『반일종족주의』, 미래사.

2) 『반일종족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민족문제연구소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2019, 『"반일종족주의" 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근현대사기념관, 2019, 『한일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황태연 외, 2019, 『일제종족주의』, 넥센미디어; 정혜경 외, 2019, 『반과대를 논한다』, 선인; 전강수, 2020,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한겨레출판; 강성현, 2020,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푸른역사 등이 있다.

3) 이우연, 2016, 『전시기 일본으로 노동동원된 조선인 탄 · 광부의 임금과 민족간 격차』 『경제사학』 61, 이 논문은 일본의 강제노동 부정론자인 三輪宗弘의 주선으로 큐슈대학기록자료관 산업경제자료부 편집 『에네르기연구』 제32호(2017.3)에 번역되어 실렸다.

들이었다. 1959년 일본 외무성이 「재일조선인의 도래와 인양에 관한 경위, 특히 전시 중 징용노동자에 대해」에서 “제2차대전 중 내지에 도래한 조선인, 따라서 아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대부분은 일본정부가 강제적으로 노동시키기 위해 데려온 것과 같은 오해와 중상이 세간에 일부 있는데, 이는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한 이래 버전을 달리해서 鄭大均, 岡田邦宏, 西岡力 등에 의해 되풀이해서 나왔다.<sup>4)</sup> 그러한 강제노동 부정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극복한 것이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の『朝鮮人戰時勞働動員』(2005, 岩波書店)이다. 민족차별 부정과 강제노동 부정을 가장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비판·극복한 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04년 한국에서도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계기로 수 많은 자료가 발굴되고 연구 성과도 폭발적으로 축적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강제노동 부정론을 증거자료를 들어 일일이 비판하기보다는 인식론상의 오류와 함께 분석틀과 사료 해석의 오류, 두 가지 방향에서 종합적인 비판을 하려 한다. 전자는 식민지 사회를 둘러싸고 추구하는 역사인식의 문제이고 후자는 논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방법론과 해석상의 기술적인 문제이다. 둘은 범주상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실은 연결되어 있다. 역사인식이 방법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사료를 다르게 해석하도록 규정하는 기능—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을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일찍이 김영달은 「연구노트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해」(1990)에서 조선인 전시동원의 특유한 문제로서 ① 강제연행(폭력적인 강제이동) ② 강제노동(학대, 노예적 노동) ③ 민족차별(대우, 임금, 전후처리에서의 민족차별) 세 가지를 들었다. 조선인 강제동원은 “민족적인 지배·피지배 구조 속에서의 동원이라는 점에서 일본인의 전쟁동원과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sup>5)</sup>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제동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강제연행이 주요 쟁점으로 되고 있으나 “노무동원의 배경과 실태, 그 구조 등을 보면 강제노동과 민족차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강제연행은 부수적으로(어떤 의미에 노무동원의 구조와 식민지 지배의 방식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현상”<sup>6)</sup>이라

4)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2005, 『朝鮮人戰時勞働動員』, 岩波書店, 20~31쪽.

5)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2005, 160쪽에서 재인용.

6) 亘明志, 『総力戦と戦時期における植民地からの勞務動員をめぐる』, 『京都女子大学大学院現代社会研究科紀要』第14号(2020.3), 151쪽.

는 지적은 그런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

이 글은 전시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는 민족차별이라는 식민주의 질서 하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강제노동 부정론의 인식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이우연의 방법론과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실태를 기왕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리한다.

## II. 식민주의와 민족차별 체계

### 1) 민족차별의 이데올로기와 임금체계

식민주의란 폭력과 차별에 기초한 사회체계이자 이데올로기다. 폭력에 의한 지배체제란 주권 침탈에서부터 식민지배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말한다. 식민 권력 자체가 정당성과 정통성, 합법성을 원천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폭력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이다. 또한 식민주의는 차별의 이데올로기이자 사회체계다.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 지배하기 위해서 ‘열등한 조선인’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사회 운영 또한 이 민족차별 이념을 적용했다. 이른바 ‘민도(民度)의 차’를 고안해 일본법의 적용 밖(異法<sup>7)</sup>)에 두는 한편, 민족성의 차이를 민족성의 능력 차별로 자연화시킨 뒤 공적·사적인 임금 체계에서 일본인 대 조선인을 2:1로 공식화·제도화시켰다. 이 차별구조는 식민지배 전 기간에 걸쳐 관철되고 있었다. 다만 전쟁 말기로 가면서 ‘내선일체’의 이념 때문이 아니라 총력전 체제하에서 조선인들의 불만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을 축소화시키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공식 부문부터 식민주의자들이 어떻게 차별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는지를 보자. ‘차별의 제도화’를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식민지 관료사회의 임금 차이다.<sup>8)</sup>

식민 당국자는 조선총독부와 소속관서의 관료조선인 관리에 대해 ‘文官分限令’과 ‘朝鮮臺灣滿洲及樺太在勤文官加俸令’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규정인 ‘조선인 문관의 분한과 급여에 관한 건’(1910년 9월 칙령 403호)을

7) 김창록, 2006, 「制令에 관한 연구」,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26.

8) ‘차별의 제도화’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제도(접근 기회, 연환와 대우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임금에만 초점을 맞춘다.

적용했다. 이 규정에 따라 만든 1912년의 조선인 문관 봉급체계를 비교하면 조선인 고등관의 경우 일본인 고등관에 비해 약 1등급 정도 낮은 연봉이 책정되어 있다. 조선인 고등관으로서 최고인 1급봉은 일본인 고등관 4등 1급봉에 해당하며, 2급봉은 일본인 고등관 5등 1급봉과 같다. 이에 반해 조선인이 약 30-40% 차지하고 있는 관임관은 그 차이가 더욱 커져 2배 가까운 본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본인이 받는 가봉을 합치면 그 차이는 더 확대된다.<sup>9)</sup>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1920년에 민심무마책의 하나로 별도의 조선인 관리 봉급 규정을 폐지하고 일본인 봉급 체계로 흡수하였다. 그러나 차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던 규정을 폐지하여 단일 임금체제로 만들었으나 '조선어 장려수당' 등을 신설하여 일본인 관리를 우대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차별을 개발하였다. 일본 본국과 조선, 대만 등 관료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岡本眞希子は 1920년대 이후의 임금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족차별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 제도(『민족별 봉급규정』-인용자 주)는 1919년 이후 '문화정치' 하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통일된 봉급체계에서는 본국과 식민지의 재근자의 지위·봉급은 민족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는 같도록 하였으며, ...그러나 민족격차는 본봉이 아니라 각종 수당 부분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먼저 각 식민지에 재근하는 일본인 관료에게만 지급되는 제도로써 식민지재근가봉이 있었다. 시대·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조선·대만에서 기본적으로 본봉의 60%가 가능했다. 또한 관사비용도 일본인에게만 지급되고, 나아가 은급에서도 일본인 관료에게는 더 나은 대우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각종 수당으로 일본인 관료의 봉급은 실질적으로 상당 정도 늘어나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좋은 대우를 받는 결과가 되었다.<sup>10)</sup>

본봉 체계를 통합하여 기본급에서의 차별은 없었으나 '식민지 근무 가봉제도, 관사 비용 지급, 은급·부조금의 대우제도'를 통해 일본인 관료의 특권, 즉 민족차별은 계속 유지되었다는 설명이다.

관료계의 민족별 임금 차별 규정은 식민지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근속연수, 기능, 직급, 작업시간, 학력 등) 하에서

9) 김민철, 2001, 『조선총독부 직원록 해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jw&fileName=intro\\_jw.pdf](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jw&fileName=intro_jw.pdf)

10) 岡本眞希子, 2008, 『植民地官僚の政治史』, 三元社, 224~5쪽.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을 직접 비교한 자료는 뒤에서 다룬 1942년의 조사를 제외하면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민족간 임금을 비교해야 ‘차별’의 정확한 실태를 직접 도출할 수 있지만, 당시의 조사 통계로는 한계가 많아 어렵다. 제한된 자료인긴 하지만 몇 가지 자료로 추론해 보자.

〈표1〉은 1930년대 초 남자 성년 노동자 임금을 비교한 것인데,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이 조선인 노동자의 그것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그러나 일본인 직공 가운데는 ‘직공 감독이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공만의 평균임금은 1원87전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도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자료만 가지고 직접 민족별 임금차별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다. “직공의 임금은 기술적 숙련도, 생활정도, 연령, 학력, 근속연수, 성별, 지방물가나 부속급여, 복리시설의 유무와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內鮮支 공장노동자의 임금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다 할 수 있다.”<sup>11)</sup>

결국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술적 숙련을 요하지 않는 시간급제하에서 노동하는 인부일 것이다. 그것에 근접한 조사가 〈표2〉다. 〈표1〉과 같은 시기의 조사로 경성, 부산, 기타 4개 지역의 철도국 공장에서 공작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일본인 평균임금을 100으로 하면 조선인은 66.5%에 이른다. 이것은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표1〉 1930년대 초 남자 성년공 임금(일급)<sup>12)</sup>

(단위 : 엔)

종별	최고	최저	평균
일본인	7.15	0.1	1.87
조선인	4.8	0.1	0.85
중국인	3	0.1	0.84

비고 : 최고임금의 경우 일본인은 인쇄업, 조선인은 정미공장, 중국인은 가구제조공장 직공의 임금임.

〈표2〉 철도국 공장의 공작 분야의 총괄임금(월급)<sup>13)</sup>

(단위 : 엔)

	최고	최저	평균
일본인	111.00	17.70	72.57
조선인	78.30	15.00	48.28

1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經濟調査會, 1933, 『朝鮮人勞働者一般事情』, 77~9쪽.

12) 같은 책, 78쪽.

13) 같은 책, 80쪽.

〈표3〉은 1929년 1월초부터 12월까지 조선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50인 이상 직공사용공장 196개소, 37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중 광산노동자의 임금만 정리한 것이다. “일본인 공장노동자는 평균 1원16전(남녀 성유년 공 총평균)이요, 조선인은 58전이니 일본인이 꼭 2배의 많은 임금을 받는 셈”<sup>14)</sup>이라는 평가가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광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3〉 채탄업의 임금체계

민족별	성별	연령별	임금(일급)	종업시간	종업자수	공장수
일본인	남	성년공 유년공	2.02 —	9.6 —	76 —	10
	녀	성년공 유년공	0.7 —	10 —	3 —	
조선인	남	성년공 유년공	0.81 0.44	9.5 9.5	5,053 6	
	녀	성년공 유년공	0.46 0.29	9.1 10	159 4	
중국인	남	성년공 유년공	0.93 —	9.3 —	376 —	
계	남	성년공 유년공	1.25 0.44	9.5 9.5	5,505 6	10
	녀	성년공 유년공	0.58 0.29	9.6 10	162 4	

출전 : 이여성 · 김세웅, 1931, 『숫자조선연구』 제2집, 92-3쪽.

그러나 이 표에서 주의할 점은 일본인 성년공의 임금이다. 이 시기 조선의 탄광에서 일하는 일본인들은 대부분 관리 감독직이기 때문에 조선인과의 임금차가 훨씬 더 커 차별의 비교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 표는 조선에서 민족별 노동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민족별 임금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식산국 관계자는 “조선인의 노동능률은 일본인 광부에 비교하면 대개 저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낮은지 수량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다. 근래 조선인 노동자도 점점 작업에 숙련되어 내지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내지인 못지않다 하며, 체력도 강건해서 두뇌를 요하는 작업에도 적당하다. 다만 책임관념이 약하고 다분히 맡은 일에 안팎이 다르며, 성격이 단순해서 부

14) 이여성 · 김세웅, 1931, 『숫자조선연구』 제2집, 81쪽.



화뇌동하기 쉽다는 결점이 있다.<sup>15)</sup>고 평가하였다. 광산 분야에서는 조선이나 일본의 노동형태나 임금제도가 대체로 같기 때문에 임금차이의 현상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sup>16)</sup>

김종한은 임금격차분해모형을 활용하여 1928년 조선토목건축협회에서 발간한 『朝鮮工用各種勞働者實狀調』를 분석한 바 있다. 노동력 차별의 존재형태는 <표4>와 같이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임금차별’로 구분되는데, “임금격차는 자본의 노동력 차별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한다. 경제학적으로 식민지기의 임금격차 분해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sup>17)</sup>

〈표4〉 노동력 차별의 존재형태

노동력 차별의 존재형태	세부유형	원인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의 차별(총자본에 의한 차별)	세대적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 : 양육과정에서의 차별 → 기회의 차별	교육의 차별적 제공 주거의 격리 → 저학력, 저기능 → 직종 선택의 범위 제한
	현실적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	현실적 노동력 재생산비 이하의 저임금 → 노동력의 가속적 소모 → 재교육 및 훈련기회 상실
고용차별	여성노동력에 대한 차별 소수집단(인종)에 대한 차별 고용형태상 차별(임시공문제) 승진·해고상의 차별	개인적 또는 인종주의적 편견 노동자통제 및 지배수단 → 직업 격리, 취업기회 제한, 직무배치 차별
임금차별	노동력 평가상의 차별	특정 노동자(집단)에 대한 고용주의 혐오, 관행, 통계적 차별
	지출한 노동평가상의 차별	임금지불형태

출처 : 김형기, 1980, 「노동력 차별과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제4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80 : 김종한, 1988, 80쪽에서 재인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토목건축 노동시장의 일본인-조선인 간 임금격차 크기 중 27.4%가 숙련 관련 격차이고 72.6%가 노동력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이며, 72.6% 중 차별로 인한 일본인 이익부분은 35.2%, 조선인 불이익부분은 37.4%이다. 따라서 37.4%가 1928년 조선에서 토목건축 노동자의 민족별 임금차별 크기의 최소치라고 하였다.<sup>18)</sup> 선재원이 1930-1942년

15)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經濟調査會, 1933, 87-8쪽.

16) 櫻井義之, 1934, 『朝鮮に於ける鑛山勞働事情』(社會政策時報 제171호 별쇄), 20쪽.

17) 김종한, 1998, 「1928년 조선에서의 민족별 임금차별-토목건축관계 노동자의 임금격차 분해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24호, 79-80쪽.

18) 김종한, 1998, 95쪽.

간 오노다 시멘트공장의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 임금을 비교한 뒤 “1940년대 초에 민족별 임금격차가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1930년대 전체에 걸쳐 조선인 노동자 임금이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sup>19)</sup> 고 내린 평가와도 유사한 분석이다.

그러나 이우연·차명수는 이 37.4%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비판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민족간 임금격차의 추이를 추정하면서 숙련·비숙련 모두 식민지 지배 초기에는 조선인 임금이 일본인의 절반 정도였으나 식민지 지배가 끝날 무렵에는 70-80%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감소는 식민지기 동안 ‘인적자본이 축적한 결과’ 때문이라고 해석했다.<sup>20)</sup> 일본인-조선인의 민족간 임금격차가 차별이 아닌 능력차 때문이며, 임금차가 감소한 것은 그 능력차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민족간의 제도적 임금차별을 부정하고 단지 능력 차이로만 해석하여 식민지 사회의 차별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식민지배 말기에 민족간 임금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정책 차원에서 전시체제하의 임금 정책을 간단하게 개관해보자. 중일전쟁 후 일본 정부는 1938년 3월 임금통제령, 10월 가격동통제령과 임금임시조치령을 공포해 물가와 대형 광산·기업의 노동자 임금을 9월 18일자로 동결하였다.(9·18정지령) 그러자 공정임금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던 기업이 임금을 인하해 일본인 노동자의 불만은 커졌으며, 신규고용이 어려워졌다. 한편, 1939년 9월부터 조선에서 모집을 시행하면서 ‘취업 안내’에 1일 2원 이상이라 하여 공정임금보다 높게 선전함으로써 약속 위반이라는 분쟁이 발생했고, 일본인 노동자들도 자신들보다 높다고 항의하여 혼란이 극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9.18정지령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보다 높은 현상도 일어나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으로 이동해 노동력 부족은 더 심화되었다. 혼선을 수습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1940년 7월 미경험노동자의 초급임금을 전면 인상하고, 10월에는 임금임시조치령을 폐지하고 임금통제령을 전면 개정하였다. 주 내용은 임금상승 억제와 노동자 이동방지였다. 임금 억제와 물가상승으로 기업 자구책을 모색하고, 청부제(작업량)를 확대하고 각종 수당 증액과 항목 신설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결국 1943년 3월 전시행정특례법, 10월 군수회사법,

19) 宣在源, 2006, 『近代朝鮮の雇用システムと日本』, 東京大學出版會, 76쪽.

20) 이우연·차명수, 2007, 「식민지 조선의 임금 수준과 구조」 『경제사학』 제43호, 53-5쪽.

12월 군수회사법시행령을 통해 저임금정책을 포기하고, 1944년 9월 징용령 시행과 조선인에 대한 각종 원호조치를 시행하였다. 정책적으로 혼선을 빚으면서도 노동력 수급을 위해 임금 인상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기본급의 민족별 차등 적용을 없애 조선인의 임금도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sup>21)</sup>

이처럼 말기의 임금격차 감소는 시장적 요소와 정책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해야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민족별 임금 차별을 선형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능력차’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전시 정책과 차별구조의 전체상을 보지 못한 것이다.

## 2) 전시체제하의 임금 체계와 광산노동자

‘노무동원계획’에 따라 1939년부터 일본의 광산과 토목공사 현장에 집단 동원이 실시되자 조선인의 노동능률에 대한 행정 당국과 기업측의 관심도 높아졌다. 당시 관계자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보고로는 1944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15일간 일본 내 7개현을 방문하여 ‘일본 거주 조선인에 관한 실정조사’를 한 내무성 속 矢野平馬가 관리국장에게 올린 복명서를 들 수 있다. 복명서에서 그는 조선인의 능력이 저열해 “탄광노무에서는 내지인보다도 20% 능력이 부족하며 탄광노무 이외의 일반 노무에서도 같다”고 보고하였다.<sup>22)</sup>

이런 차별의 이데올로기를 임금체계에서 가장 잘 구현한 기업이 住友 鴻之舞鑛業所가 아닐까 생각한다. 광업소의 『半島勞務員統理綱要』(1941년 1월)는 조선인 노무관리 문서로서는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표5>는 광업소가 직종별·민족별 표준양성기간을 설계한 것이다.

<표5> 직종별 표준양성기간

		7분역(70%)	8분역(80%)	9분역(90%)	1인(100%)
鑿岩夫	조선인	1개월	5개월	16개월	
	일본인	1개월	4개월	10개월	2개년
手掘夫	조선인	1개월	3개월	15개월	
	일본인	1개월	3개월	12개월	2개년

비고 : 조선인으로서 9분역의 표준기한에 도달한 자 중 선발해서 실시와 간단한 학과고사를

21) 守屋敬彦, 2013, 「韓民族被強制連行者は賃金をもらっていないかった」, 『季刊 戦争責任研究』 第80号 (2013年 夏季号), 35-6쪽.

22) 「復命書」(矢野平馬-管理局長, 1944년 3월), 水野直樹, 『戰時期植民地統治資料』 第7券, 柏書房, 222쪽.

支柱夫	조선인	1개월	3개월	18개월	
	일본인		2개월	12개월	2개년
工作夫	조선인			12개월	
	일본인			12개월	2개년
運轉夫	조선인			12개월	
	일본인			8개월	2개년
運搬夫	조선인			3개월	
	일본인				2개년
漏斗拔	조선인		2개월	3개월	
	일본인			3개월	2개년
목재운반 기타	조선인			3개월	
	일본인				2개년

실시해 통과한 자를 1인역으로 하며, 일본인으로서 1인역을 만 2개년 이상 일한 뒤 인물, 작업, 건강 모두 우수한 자는 1.1인역으로 한다

작업부의 경우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7분역(7分役=70%의 임금단가)에 시작하지만, 8분역에서는 1개월, 9분역에서는 무려 6개월의 기간 차가 일어난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입사했다 해도 10개월째 되면 일본인에게 90%의 임금단가가 적용되나 조선인은 여전히 80%의 임금단가가 적용된다. 그리고 1.1인역은 2년 후 일본인 우수자만 해당된다. 수굴부, 지주부, 공작부, 운반부 등에서도 차이를 두고 있다.<sup>23)</sup> “조선인의 능력은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선입관에 따른 차별의 표현이었다. 광업소는 이를 기준으로 정액과 청구의 단가를 정해 민족간에 임금 차별을 두었다. 鴻之舞鑛業所의 임금체계가 이렇다면 住友 계열의 다른 회사 역시 같은 체계를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차별인식을 거부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시도한 보고서도 있다. 북해도탄광기선주식회사의 노무부장 前田一은 『半島勞務者の勞務管理』에서 “어느 정도 조선인이 기능면에서 내지인 표준형보다 매우 떨어진다는 것은 경험상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지인이라 해도 전폐업자, 단기협력대처럼 이른바 아마추어 직공의 능률은 반드시 표준형에 도달하지 못함은 조선인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능률 여하를 논하려면 모름지기 훈련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아마추어로 구별해서 그 값을 논해야 한다. 시골뜨기 조선인과 내지 숙련공을 비교해 조선인은 비능률적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조선인에 대해 너무 잔혹한 짓이다. 오늘날 세상에 조선인

23) 住友 鴻之舞鑛業所, 1941, 『半島勞務員統理綱要』: 林えいたい 監修責任編集 守屋敬彦 編集, 1991, 『戰後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Ⅲ 朝鮮人2 下卷, 明石書店, 1463쪽.

의 능률을 내지인의 50% 또는 70%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거치지 않은 조선인에 대한 평가일 뿐”<sup>24)</sup>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 고도의 기초훈련을 주고, 다시 전문기술지도자를 붙여 굴진작업 훈련을 실시한 성적은 도표와 같이 2주째에 내지인 평균능률의 95%에 도달하고, 다시 1개월 훈련기간 종료 후 성능검사 실시를 봐 적성배치를 한 결과, 2주째 내지인 평균능률을 능가하여 최고능률도에 육박하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sup>25)</sup>고 평가하였다.

이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기업경영가와 조선인 지도훈련 노무담당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그는 조선인의 기량이 일본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통념을 비판하고 훈련을 통해 일본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통계로 증명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능률 문제를 과학적인 실험과 통계를 들어 자세하게 분석한 것과는 달리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내지인과 조선인의 구별은 없다’<sup>26)</sup>고 짧게 언급하는 것만으로 그친다. 그걸 다룰 경우 현상의 차이를 설명해야 하는데,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데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우려도 있어 문제를 피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인의 노동 능력과 능률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보고는 또 있다. 1943년에 간행된 『半島人勞務者の作業能力に關する科學的見解・炭鑛に於ける半島人勞務者』는 관알선으로 동원된 조선인 탄광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사례에서 보듯이 탄광의 규모나 노무관리의 경험 등에 따라 노동능률의 진척에 차이가 있다.

A탄광	1개월 30%, 2개월 50%, 4개월 70%	노동집약화 탄광
B탄광	1개월 미만 50%, 2개월 미만 60%, 3개월 미만 70%, 4개월 이상 90%, 5개월 100%	다른 탄광과 유사
E탄광	3개월간 80%, 4개월 이상 차이 없음	노무관리 경험이 풍부한 탄광

채탄 작업의 집약 정도와 조선인 노동자 사용 경험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핵심은 작업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표6>의 F탄광 N갱에서는 동일 작업 현장에서 20-30명씩

24) 前田一, 1943, 『半島勞務者の勞務管理』, 山海堂, 144-5쪽.

25) 같은 책, 146-7쪽.

26) 같은 책, 149쪽.

각각 일본인, 조선인만으로 편성한 현장이 있다. 실험 결과 두 개 조의 1인당 출탄량은 비슷했다. 능력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sup>27)</sup>

〈표6〉 민족별 두개 조의 능력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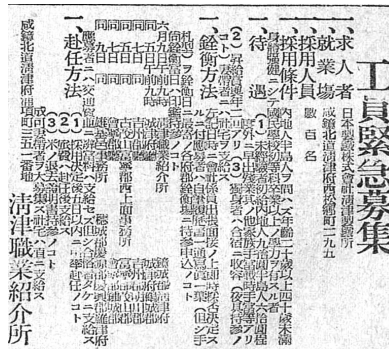
조사시기	일본인조			조선인조		
	출탄총량	연인원	1인당 출탄량	출탄총량	연인원	1인당 출탄량
1941년 11월	2,724톤	550명	5.04	2,960톤	591명	5.01
1941년 12월	3,338	803	4.16	3,290	720	4.57
1942년 1월	2,928	659	4.45	3,391	762	4.45

이 보고에서 흥미로운 것은 ‘임금’에 관한 조사다. 근로보국대와 조선인·일본인 신규 노동자 등 ‘미숙련자의 도입에 따라 숙련노동자가 입은 영향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한 것이다. 임금통제령 시행 이후 3개월간은 정액일급을 지급하고, 3개월 이후는 채탄, 굴진, 충진, 운반 등 기간작업에서는 ‘단체 출탄고 지불제’가 일반적이다. 정액일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기계, 공작, 선탄, 잡역 등이다. 문제는 단체로 채탄한 양에 단가를 적용할 때 같은 조라 하더라도 개인별로 차등단가가 적용되었다. 근로보국대와 신참자의 혼입으로 총출탄량이 내려가 숙련공이 받는 피해를 보종해준다는 취지에서 현장계원의 판정에 따라 비율을 보정해주는 제도이다.<sup>28)</sup> 그러나 이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현장계원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도 많아 조선인들이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인의 노동능력과 능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있었으나 사회와 기업은 차별 의식과 함께 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앞서 鴻之舞鑛業所 자료에서 확인한 민족별 임금차별체계는 일본제철 청진제철소의 모집 광고에서도 볼 수 있다. 1943년 6월 3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모집 광고는 20-40세 미만의 국민학교 초등과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자 중 미경험자 초급 일본인은 월 90원, 조선인은 60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선전하였다. 같은 조건을 가진 초급 조선인에게 일본인에 비해 67% 정도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광고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7) 「半島人勞務者の作業能力に關する科學的見解炭鑛に於ける半島人勞務者」, 工業勞動及勞務管理 第九冊(1943), 林えいたい, 1991, 『戰後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下卷 朝鮮人1, 明石書店, 1784쪽.

28) 「半島人勞務者の作業能力に關する科學的見解炭鑛に於ける半島人勞務者」, 林えいたい, 1991, 1785-7쪽.



다음에 소개하는 통계는 민족별 임금차별의 실태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조사자료다. 조선총독부는 1942년 6월부터 매년 조선 내에 있는 노동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주목할 만한 통계가 <표6>과 <표7>이다.<sup>29)</sup> 그리고 <표6>과 <표7>에서 석탄광업 분야만 뽑아서 민족별로 비교한 것이 <표8>이다. 이 통계는 근속연수와 민족별 평균임금을 결합시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우연이 주장하는 능력차이와 민족별 임금차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현상적으로 볼 때, 정액제에서는 조선인이 일본인 임금의 평균 44.8%, 청부제에서는 68.4%를 받는다. 정액제에서 차이가 더 나는 것은 일본인 다수가 관리·감독직에 있어 평균 임금이 더 올라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동일 직종이라 해도 관리직과 현장직의 차이가 있어 일대일 비교를 통해 임금차별을 곧장 도출해낼 수 없다. 다른 통계와 마찬가지로 이 통계 역시 식민지 조선 사회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인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를 추론하는 데 의미 있는 경향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표를 통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석탄광업 분야에서는 근속연수가 시간당 평균임금(정액이나 청부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년차나 10년차 모두 1인당 평균임금은 27전이다. 따라서 최소한 석탄광업 분야에서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근속연수를 통해 ‘능력차=경험의 축적’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의미 없다는 것을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우연이 근속연수를 통해 임금차이를 증명하려는 방법론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다는 것을 이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29) 朝鮮總督府, 1943, 『昭和18年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 331-2쪽.



〈표6〉 산업 해당사업체 재직년월수 및 정액·청부별 노무자수와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일본인 남자)

	총수				금속광업				석탄광업			
	정액		청부		정액		청부		정액		청부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총수	1353명	36전	68명	37전	972명	36전	50명	38전	291명	38전	16명	35전
3개월 미만	112	29	5	33	87	29	4	33	16	33	1	34
6개월	103	34	5	31	65	32	1	27	25	40	4	32
1개년	140	33	11	28	90	33	9	29	33	32	2	25
1.6개년	138	31	7	32	96	30	3	34	33	31	4	31
2개년	92	35	9	37	68	35	8	50	19	34	1	28
3개년	193	35	9	38	132	34	8	36	49	37	1	54
5개년	252	38	8	34	173	37	6	36	71	41	1	33
10개년	248	41	13	45	194	41	10	43	42	44	1	54
일용	4	31			4	31						

〈표7〉 산업 해당사업체 재직년월수 및 정액·청부별 노무자수와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조선인 남자)

	총수				금속광업				석탄광업			
	정액		청부		정액		청부		정액		청부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노동자수	1시간 평균임금
총수	77007명	16전	69699명	23전	41338명	16전	35483명	20전	24827명	17전	27891명	26전
3개월 미만	10876	15	10677	21	5237	15	4403	19	3770	15	5313	24
6개월	11114	15	11191	22	5410	15	5152	20	3643	16	4875	25
1개년	12370	16	10721	24	6309	15	4706	21	4184	16	5045	27
1.6개년	9757	16	8803	23	5198	16	4510	21	3178	16	3549	25
2개년	5735	16	5175	23	3146	16	2818	20	1932	17	1946	26
3개년	9852	17	8303	22	5403	16	4656	20	3276	17	2867	26
5개년	10757	17	9077	22	6266	17	5432	21	3429	18	2898	27
10개년	5335	20	4627	22	3589	20	3219	21	1158	20	969	27
일용	46	20	121	29	45	20	62	29	1	20	59	29

〈표8〉 석탄광업에서의 민족별 임금 비교표

단위 : 1시간 평균임금=전

	일본인				조선인					
	정액		청부		정액			청부		
	노동자수 (명)	1시간평균 임금A	노동자수 (명)	1시간평균 임금B	노동자수 (명)	1시간평균 임금C	C/A×100	노동자수 (명)	1시간평균 임금D	D/B×100
총수	291	38	16	35	24827	17	44.8	27891	26	68.4
3개월미만	16	33	1	34	3770	15	45.4	5313	24	70.5
6개월	25	40	4	32	3643	16	40	4875	25	78.1
1개년	33	32	2	25	4184	16	50	5045	27	108



1.6개년	33	31	4	31	3178	16	51.6	3549	25	80.6
2개년	19	34	1	28	1932	17	50	1946	26	92.8
3개년	49	37	1	54	3276	17	45.9	2867	26	48.1
5개년	71	41	1	33	3429	18	43.9	2898	27	81.8
10개년	42	44	1	54	1158	20	45.5	969	27	50
일용					1	20		59	29	

한편, 흥남비료공장의 임금 자료를 가지고 민족별 임금 차이를 분석한 양지혜의 연구는 전시체제기에 들어 임금체계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민족 차별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임금정책을 세웠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흥남비료공장의 무경력 초임금 규정에 따르면, 1943년 이전에는 민족별 차등을 두었으나, 1943년에 정부의 임금정책을 수용하여 단일 임금기준을 만들었다. 기본급 규정에서 유지되었던 제도적 차별이 철폐된 것이다. 그러나 흥남비료공장은 새로운 차별 시스템을 개발했다. 근무 경력 외에 군대·형무소·경찰 경력을 우대하고, 일본인에게만 在鮮수당을 지급했다. 여기에 재선수당이 포함된 일급을 기준으로 각종 고정·성과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총액에서 민족별 차이가 벌어지는 효과를 낳았다. 그 결과 1942년과 1945년 사이에 민족 간 임금 격차가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고 한다.<sup>30)</sup> 선재원은 양지혜의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그 주요 원인을 임금제도(수당 산정 방식)가 아닌 승진제도의 차별에서 찾았다. 승진에서의 차별이 임금에서의 차별을 낳았다는 분석이다.<sup>31)</sup> 어느 원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두 연구를 통해 민족간 임금차별은 지속되었으며, 그것은 차별을 유지하려는 제도상의 방법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3) 두 가지 오류-이우연의 증명은 성공했는가

이우연은 2016년에 발표한 「전시기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과 민족간 격차」에서 기왕에 발굴되어 이용되었던 자료를 재해석하면서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은 일본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민족 간 임금의 차이는 ‘민족차별’이 아니라 생산능률의 차이를 반영한

30) 양지혜, 2020,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의 흥남 건설과 지역사회」,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06-317쪽.

31) 宣在源, 2020, 「植民地朝鮮における賃金格差の実態—日本窒素興南工場 1936-1945—」, 『東京経大会誌』第297号 참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총액의 최소 40%가 조선인에게 인도되었고… 적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임금차별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결함과 잘못된 결론을 갖고 있다. 첫째는 자료상의 문제고, 둘째는 해석상의 오류다. 守屋敬彦에 따르면, 광산 노동에서 임금 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전제로 개인별 임금대장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노동시간과 작업 현장의 조건 등이 작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임금대장에는 크게 동일 기업 안에서 작성된 임금대장(개인임금기본대장)과 이것을 기초로 경리과에서 작성한 몇 가지 종류의 임금대장이 있다. 전자는 기초 데이터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과 ‘광부 명부’를 대조해야 비로소 민족간 임금 격차가 차별인지 능력차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우연이 증거로 제시한 통계는 자료의 성격상 임금 차별의 유무를 증명해주지 못하는 파생자료이다. 개인임금기본대장을 토대로 작성한 기업의 각종 임금대장은 연간·월간·일일간의 수많은 사람들의 근속기간수, 노동능력(숙련도)이 다른 노동자의 가동일수와 시간수, 같은 직종이지만 현장의 차이에 따른 노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숫자로 환산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아무리 많이 모아서 분석해도 단지 어느 쪽이 많은지 적은지 차이만 현상적으로 확인해 줄 뿐이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를 부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sup>32)</sup> 다시 말해 증명할 수 없는 자료로 증명을 시도한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석상의 잘못이다. 이우연이 민족별 임금차별이 없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두 개의 통계를 보자. <표9>는 북해도 D 탄광의 민족별 임금 분포를, <표10>은 북해도 D탄광의 민족별 ‘근속연수’ 분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9>는 박경식이 『강제연행의 기록』에서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임금은 하루 평균 4엔인데 조선인 노동자는 훨씬 낮아 일본인 노동자의 반 정도였다. 1943년 홋카이도의 한 탄광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민족적 차별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sup>33)</sup>고 결론내릴 때 제시한 표다. 그런데 이우연은 박경식이 수집·정리한 자료 중에 <표10>의 자료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분만 떼어 내

32) 守屋敬彦, 2017, 「2017.4.11 経付 『産経新聞』 記事と三輪宗弘氏と九州大学 記録資料館 産業経済記録資料部門 編集, 『エネルギー史研究』 第32号(2017.3) 所収 李宇衍 論文 「戦時期日本〜労働動員された朝鮮人鉱夫石炭・金属の賃金と民族間格差」について, 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메일링리스트(2017년 6월 5일 게재).

33) 박경식 지음/박경욱 옮김, 2008,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원, 86쪽.

어 중요한 문제를 예단하고 선부른 결론을’ 내놓았으며, 이런 오류가 지난 50년 간 한 차례도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sup>34)</sup>

이우연이 <표10>을 가지고 대단한 발견인 양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근속기간의 차이 때문에 민족별 임금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는 것이다. 과연 그 주장은 타당한가. 표에서 “근속기간으로 표현되는 작업능률의 차이를 반영”한 부분은 3년 이상의 일본인 근속자에게는 해당될 수 있으나, 정작 비교대상이 되는 1년 미만과 1-3년까지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우 민족별 임금차가 어떤 내용인지를 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임금차가 민족차별인지 능력차이인지는 이 통계만으로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표9>와 <표10>을 연결해서 보면 1년 미만의 조선인 273명(74.8%)의 임금은 50엔 미만에 집중되어 있고, 1년 미만의 일본인 276명(29.6%)의 임금은 30-90엔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35)</sup> 그의 주장처럼 ‘근속연수, 즉 경험의 축적’이 같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평균 임금차가 이렇게 나는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주장과는 반대로 <표10>은 오히려 민족별 임금차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9> 북해도 D탄광의 민족별 임금 분포

단위 : 명, %

	30원 미만	30-50	50-70	70-90	90-110	110-130	계
일본인	32 -3.6	123 -14	187 -21.3	194 -22.1	181 -20.6	160 -18.2	877 -100
조선인	117 -36.1	126 -38.9	40 -12.3	22 -6.8	7 -2.2	12 -3.7	324 -100

<표10> 북해도 D탄광의 민족별 근속연수 분포

단위 : 명, %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계
조선인	273 (74.8)	53 (14.5)	39 (10.7)	- -	- -	- -	365 (100.0)
일본인	276 (29.6)	123 (13.2)	106 (11.4)	101 (10.8)	42 (4.5)	285 (30.5)	933 (100.0)

34) 「이우연, 2016, 170쪽. 이우연은 『반일종족주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데, 학자의 연구 윤리까지 거론하면서 박경식을 비난하고 있다. 박경식이 임금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 ‘임금분포표’는 이용하면서 자신의 논리에 불리한 자료인 ‘근속기간분포표’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강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연구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연구윤리로 볼 때 일종의 사기이며 역사왜곡, 나아가 악의적 선동입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민족적 임금 차별’이라는 또 하나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고, 반일 종족주의는 그만큼 심화되었습니다.”(94-9쪽) 아무리 대중을 상대로 한 글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악의에 찬 글을 쓰며 선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학자로서의 윤리는 오히려 이우연에게 해야 할 말이다.

35) 같은 글, 167-8쪽.

이우연이 ‘근속 연수’만을 가지고 민족 차별이 없음을 부정하고자 제시한 북해도의 B탄광과 I탄광의 자료 역시 D탄광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36)</sup>

〈표11〉 B탄광의 근속기간과 임금

단위 : 명, %

A 근속연수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계
조선인	194 -20.8	524 -56.2	215 -23				933 -100
일본인	2,263 -41.8	861 -15.9	523 -9.7	448 -8.3	305 -5.6	1,017 -18.8	5,417 -100

B 임금							
	30원미만	30-50	50-70	70-90	90-110	110엔이상	계
조선인	130 -13.7	68 -7.1	98 -10.3	134 -14.1	147 -15.4	375 -39.4	952 -100
일본인	443 -8.7	655 -12.9	611 -12	753 -14.8	1,179 -23.2	1,435 -28.3	5,076 -100

B탄광의 자료는 이우연식으로 설명되지 않은 많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조선인 194명이 30원 미만 구역부터 받는다고 가정하면 30원 미만에 130명, 30-50엔에 68명이 분포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일본인 2,263명의 경우는 어떠한가. 30원 미만에 443명, 30-50엔에 655명, 50-70엔에 611명, 그리고 70-90엔 사이에 일부 분포되어 있다. 동일한 근속연수를 가진 조선인과 일본인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얼까.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우수해서 작업 능률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더 많아서인지 표는 설명하지 못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비교를 하려면 같은 조건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는 것을 비교해야지 숙련도가 다른 것을 비교해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이 자료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경우, 〈표8〉과 같이 근속기간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90엔 이상 임금을 받은 조선인 522명은 근속기간 2-3년 전체와 1-2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인의 경우 90엔 이상이 2,614명인데, 3-5년 이상 1,770명과 2-3년 경력자 523명, 그리고 1-2년 경력자 300명 정도가 해당한다. 즉 이 분포는 일정 정도의 숙련도(1년 이상)를 가지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시간이나 채탄량에 따라 임금차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36) 이우연, 2016, 169쪽.

있다. 탄광 노동의 특성상 근속기간이 임금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우연은 근속연수를 가지고 기존의 연구를 모두 부정하지만, 그것은 守屋敬彦의 지적처럼 기본적으로 탄광 노동의 실태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잘못된 이해다.

그렇다면 박경식이 전달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일까? 단지 임금차별의 문제만 가지고 조선인 강제동원과 민족차별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받은 강제적 훈련과 가혹한 노무감독, 학대 등은 견뎌내기 매우 힘든 정도였다. 게다가 여기에는 언제나 민족적 멸시관이 따라다녔다.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선 민족이기 때문에 받았던 처우였다. 이런 민족차별 정책을 직종, 임금, 숙소, 식사 등과 같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행해졌다. 탄광에서 가장 위험한 갱내에는 조선인을 투입했고, 토목공사에서도 가장 힘이 드는 기초공사에는 조선인을 동원했다. 사정은 다른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조선인이 받는 임금은 일본인의 반액이거나 반액을 약간 웃도는 정도였고, 주거시설과 식생활에서도 모두 차별을 받았다.”<sup>37)</sup> 수많은 증언과 자료, 현장 답사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며 이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난 5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고 하는 ‘박경식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이우연의 야심은 잘못된 전제와 방법론, 그리고 빈약한 해석으로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 Ⅲ. 강제동원·강제노동의 ‘강제성’ 문제

#### 1) 강제동원·강제노동의 개념 논쟁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우연도 강제동원·강제노동이라는 말을 부정한다. 그는 1957년 한국정부가 만든 『왜정시피징용자명부』를 두고 “피징용은 징용 동원만 아니라 모집 동원과 관알선 동원도 포함한 것이므로 틀린 것”<sup>38)</sup>이라 하고 『반일종족주의』에서도 강제징용, 강제연행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없었고, 1944년 징용령 이전의 모집이나 관알선에 응한 것은 모두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것이라는 주장한다.<sup>39)</sup>

37) 박경식, 2008, 82-3쪽.

38) 이우연, 2015, 『전시기 일본의 조선인 노무동원과 탄광의 노동환경』 위키페이퍼(2015.10, 낙성대연구소), 13쪽.

39) 이우연, 2016, 70-1쪽.

그러나 그의 주장은 틀렸다. 1945년 당시에도 강제징용이라는 말은 언론에서도 사용하고 있었고,<sup>40)</sup> 특히 징용이라는 단어는 일제의 병력 동원과 노동력 동원 전체를 두고 사회적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관용어였다. 조선을 민정 시찰한 일본 당국자도 복명서에서 “대체로 징용, 관알선, 근로보국대, 출동대와 같은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나 동원이 되는 민중에겐 징용과 관알선, 때로는 출동대나 보국대도 모두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태”<sup>41)</sup>라고 말했다.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부에서 말하는 ‘징용’도 1944년의 징용령에 따른 징용이 아니라 모집, 관알선에 의한 동원 모두를 포함한 단어였다.

1970년대 들어 일본에서 동원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제연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다가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김민영이 ‘전시노무동원’이라는 개념을 썼다. 개별적인 의미가 강한 강제연행보다는 조선인 동원이 ‘강제적 집단적 대량동원’이며, 조선내의 동원과 조선 밖 동원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전시노무동원’으로 규정했다.<sup>42)</sup> 2000년대 들어서는 ‘병합’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강제연행이 폭력성을 강조했다는 점은 유효하나 총력전 체제 하에서 식민지 주민 전체를 ‘총동원’한 구조를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조선내 동원을 포함한 일련의 조선인 노동력·병력 동원 전체를 ‘강제동원’으로 이해했다.<sup>43)</sup> 2002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초안을 만들 때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로 규정했다. 시기는 1931년부터지만 ‘노무동원계획’이 수립된 1939년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를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우연의 주장처럼 “반일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징용 실시 이전에도 조선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갔고, 노무동원 모두가 일제의 강제였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sup>44)</sup>어서 강제징

40) 『경성일보』1945.12.8. 정혜경·허광무·조건·이상호, 2020, 180쪽.

41) 『復命書』(小暮泰用→管理局長竹内徳治, 水野直樹, 『戦時期植民地統治資料』 제7권, 柏書房, 1998, 61쪽.

42) 김민영, 1995,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 한울, 23-24쪽.

43) 김민철, 2002, 『일본소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자료 실태조사』, 『일본소제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 국사편찬위원회, 339-340쪽.

44) 이우연, 2016, 71쪽.

용이나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용어에 대한 역사나 맥락을 모르면서 매우 주관적으로 추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2015년 7월 5일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이 되고, 2018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주)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을 최종 확정하자 일본정부는 강제동원·강제노동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내놓았다.<sup>45)</sup>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두 가지 방향에서 부정했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집과 관알선에 의한 강제동원을 자발적으로 돈 벌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1944년에 시행된 징용도 국제규범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예 ‘구 조선판도 출신 노동자’<sup>46)</sup>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군함도 등 산업유산 시설에 강제동원되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나 강제동원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들이 모두 징용령 이전의 모집이나 관알선으로 일본에 왔기 때문에 자발적인 취업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던 여운택, 신천수의 경우 관알선 시기에 ‘노동자특별알선’ 또는 ‘자유모집을 가미한 특수한 관알선’으로 도일했다. 형식상으로 보면 자발적인 응모가 맞다. 그러나 古庄正의 비판에 따르면, 광고모집이라 해도 일단 채용되면 퇴직 자유가 없다는 점, 원고들이 자신의 의사로 도일한 것은 2년 후에는 기술을 습득해서 조선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일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데, 1944년 초 기간연장으로 약속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들이 간절히 바라던 임금 지불도 회사가 끝내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은 감언·기만에 의해 동원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강제와 감언·기만, 이것이 광고모집에 의한 연행의 최대 특징”이라고 결론지었다.<sup>47)</sup>

노동에는 자유노동, 강제노동, 노예노동 세 가지가 있다. 원고나 한국사

45)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해석전략 연구』(김민철 연구책임)와 김민철, 2019, 『일본 메이지산업혁명유산 후속조치 이행실태 조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주요국 유산 동향 연구』 참조.

46)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4516.html](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4516.html)

47) 古庄正, 2002, 『朝鮮人強制連行と廣告募集』, 『在日朝鮮人史研究』 제32집 : 표영수 역, 2002, 『韓日民族問題研究』 3, 239쪽.



회가 일본기업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은 것은 강제노동을 말한다. 설령 자발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본인이 바라던 바와 달라 그만 두지 못하고 노동을 강요당했다면 그것은 강제노동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을 금지할 목적으로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협약)을 채택하고, 1932년 159개국이 비준하여 효력을 발생시켰다. 일본도 비준한 이 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을 강요할 경우 형사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29호협약은 강제노동을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등 비상시의 역무 등 다섯 가지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sup>48)</sup>

원고들은 이송 때부터 감시가 있었고, 공장에 간 뒤에도 노동과 생활에 통제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만두지도 못했다. 모집이나 관찰선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은 개개인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단지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노동이라 주장하는 일본 정부나 이우연은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기준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근거로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논리를 펴고도 있다. 1944년 9월 징용령으로 끌고 간 것은 법에 의한 동원이기 때문에 강제노동금지협약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는 1910년의 강제병합조약이 ‘합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즉 1910년 병합조약이 합법이면, 1938년의 국가총동원법과 1944년의 국민징용령도 합법이므로 강제노동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무엇이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한국 지배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불법 지배이며, 따라서 1939년의 국민징용령도 불법이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했다. 더구나 강제노동이라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배상책임은 유효하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한일 양국간에 청구권협정을 둘러싸고 근본적으로 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문제를 애매하게 봉합한 결과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48) 신희석 역, 2019, 「1930년 강제노동협약(LO 제29호 협약)」, 『韓日民族問題研究』 36; 도경옥, 2006, 「기획-국제인권규약 해설(2) 제8조 노예제 및 강제노동금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익과 인권』, 3권 1호 참조.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역사적 실태로서의 강제노동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ILO도 일본이 저지른 집단적인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1999년도 ILO 보고서(1998년 채택)에서는 한국의 일본군·위안부<sup>49)</sup>와 전시 산업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위원회는 이러한 비참한 조건에서 일본의 민간기업을 위한 대규모 노동자 징용은 이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이라 생각한다. 위원회는 현재 청구가 재판소에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피해자 개인배상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강구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며,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져 피해자의 기대에 맞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sup>49)</sup> 이 권고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여운택, 신천수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한 사건에서 오사카지방법원은 2001년 3월 2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제철과 피고국이 강제연행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숙사 생활과 오사카제철소의 노동환경과 임금 미지불 등의 사실로 볼 때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위법하다’고 인정했다.<sup>50)</sup> 오사카고등법원도 오사카지방법원의 강제노동 사실 인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주익종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도 부정한다. 강제노동수용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군대식 규율체계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이다.<sup>51)</sup>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까지 부정하면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것일까.

이우연과 주익종은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원고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오사카소송에서 패소한 뒤 변호단은 한국정부와 한국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2005년 한국에서 진행했다. 이때 이춘식, 김규수도 원고에 합류했다. 서울재판에서도 소송의 이유를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불금 지급에 두었다.<sup>52)</sup> 이춘식은 가마이시제철소에서 3년간

49) [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2172187](https://www.ilo.org/dyn/normlex/en/f?p=1000:13100:0::NO:13100:P13100_COMMENT_ID:2172187). (검색일, 2020.8.25)

50) 日鉄大阪製鐵所元徴用工損害賠償請求訴訟 1심 판결문(<http://justice.skr.jp/judgements/53-1.pdf>), 214~5쪽.

51) 주익종, 「강제동원 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의 행적」, 이영훈 외, 2020,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미래사, 123~138쪽.

52) 주익종은 한국에서 소송할 때 미불금 지급은 빼고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의 지급만 요구했는데, 이는 미불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전략을 비관 거라고 주장한다. 소장을 잘못 읽었는지는 알 수 없으

일하다 1944년 말 징병되어 고베에서 미군포로감시원으로 근무했다. 일본이 패전한 뒤 그는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러 가마이시제철소로 갔다. 그러나 미군의 함포사격으로 공장이 전파되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서울에서 소송을 하면서 그는 일본제철징용자 공탁명부에 예·저금으로 23,8엔이 공탁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3년간 근무한 것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또한 명부에는 1945년 12월 27일 사고로 귀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공탁금 명부가 부실하다는 반증 가운데 하나이다.<sup>53)</sup> 공탁금이 적은 이유가 임금을 제대로 다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익종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발견된 공탁명부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공탁명부는 원고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기록으로서 의미가 클 뿐이다. 기록조차 없는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 2) 강제동원의 정책 변화와 실태

강제동원·강제노동을 직접 증언하는 피해자들의 호소는 다수의 증언록이나 정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우익은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홀로코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하듯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믿지 않고, 피해를 부정한다. 한국의 강제노동 부정론자들도 이런 증언을 애써 무시하고 부정한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기왕에 보고되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거목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일본 당국자나 기업 관계자들이 생산한 자료들만 제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전시체제하 조선인 노동력의 동원은 크게 모집(1939) → 관알선(1942) → 징용(1944), 세 시기로 발전해간다. 이는 일본의 동원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동원 방식의 유형이자 발전 단계의 성격도 갖고 있

---

나 사실과 맞지 않고 해석 또한 매우 악의적이다. 미불금은 본인의 노동에 대한 보수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다. 그것이 적다고 해서 청구에서 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2012.5.24 한국대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는 미불금 지급 요구를 뺐다. 그 이유는, 첫째, 대법원이 일제의 식민지배를 불법지배로 규정하고, 둘째, 1965년의 청구권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은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한일 양국간에 재산상의 채권채무를 해결한 협정으로 해석하고, 셋째, 한국이 받은 청구권자금 중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불금(임금, 저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지배에 따른 강제노동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만 청구하게 된 것으로 법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불금 지급 청구를 배제한 것이다.

53) 법무법인 해마루, 『신일본제철 서울재판 소장(2005)』, 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전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2007, 『기업재판에 대한 한국·일본 법원의 판단과 전후보상』에 수록.

다.<sup>54)</sup> 〈표12〉는 식민지기 조선인 노동력의 이동 형태를 전시체제기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12〉 식민지기 조선인 노동력 이동의 형태

시기		모집·동원 방식	비고
노무동원 계획 이전 (~1938)	제한적 자유모집	지원모집·연고모집 청부모집·업자직영모집	도항 단속, 허가
노무동원 계획 이후 (1939~1945)	과도적 통제모집	1939. 3-1940. 2	국가요청에 의한 동원 시작
	본격적 통제모집	직업소개소령(1940.1) ①통제 모집의 본령 ②소관 부서: 경무→ 내무(치안→노동)	도입 배경: 모집의 질 낮음, 조선내 노동력 조정과 수송문제 발생
		관알선(1942.2) - 노동자 공출과 수송의 일원화	도입 배경: 모집노동자 재계약률↓, 증산요청↑
		노동자특별알선(1943. 9) - 자유모집을 가미한 특수 관알선제도	도입 배경: 관알선 노동자의 질↓, 도망자 다수로 기업에서 직접 모집
		국민징용령 개정(1944. 2) 국민근로동원령(1945. 3) 에 의한 동원	징용 대상 전면 확대

비고: 前田一, 1943, 『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 山海堂, '제2장 선인노무자의 모집과 수송';  
古庄正, 2002, 『朝鮮人強制連行と廣告募集』, 『在日朝鮮人史』 제32집; 亘明志, 2020,  
『総力戦と戦時期における植民地からの勞務動員をめぐって』, 『京都女子大学大学院  
現代社会研究科紀要』第14号 등 참조.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전, 일본정부는 조선에서 취업목적으로 도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1934년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 각의 결정). 일본인의 실업 문제나 민족간의 대립 격화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군수 경기가 생겨 중화학공업이나 탄광·광산 등의 광업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일본인 실업자도 30만 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한 탄광 등의 취업자 수는 늘지 않았다. 그래서 탄광업자들은 조선 농촌의 과잉 인구에 눈을 돌려 도항 제한 철폐를 주장하게 되었다. 1939년 일본정부는 조선에서 일본 탄광 등에 배치할 노동자 8만 5천명을 포함하는 노무동원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45년까지 매년 집단적인 노무동원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54) 『반반대를 논하다』의 저자들은 ‘모집→관알선→징용’의 전개를 동원 유형으로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 유형이 같은 시기에 병존했다는 지적은 맞으나 강제성이란 면에서는 정도가 뒤로 갈수록 강화되었다는 점, 관알선이나 특별알선(모집)으로 동원된 노동자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굳이 기업이 추가 비용부담을 들어 1944년 9월을 기점으로 징용으로 전환할 이유도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동원 방식의 차이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64-71쪽)

수립하고 실행했다.<sup>55)</sup>

1939년 9월 조선에서 일본으로 송출할 노동자 모집이 개시되었다. 이 해는 심각한 가뭄 피해가 있어 응모자도 다수 있었으나 해당 탄광 등에서는 모집 조건과 달라 분쟁이 빈발했다.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강제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실상은 달랐다. ‘모집’과 ‘연고모집’(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의 연고자를 채용하는 모집)의 취업처를 비교하면 연고모집은 74.0%가 공장에서 일했다. 특히 평화산업의 공장에 취업했으며, 석탄산과 금속산 등에 취업한 자는 7.8%에 불과하다. 반면 모집은 광산 취업자가 75.7%에 달하며 특히 선탄산 취업자가 68.0%이고, 공장 취업자는 겨우 0.9%이다.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장도 “모집에 의한 조선인 노동자는… 내지 취업처가 기피지이며 갱내작업하는 것을 꺼려 예정된 노동자를 이주시킬 수 없음에 반해, 소위 연고로 내지에 도항해서 평화산업, 자유노동 등에 취로하는 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라 인정하고, 연고모집을 제한하고 집단모집을 권장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희망자가 많은 초기 조선인 전시 노동력동원은 도일을 조선인에게 강제할 필요는 없었으나 국가가 중요시하는 특정 시국산업 분야에 조선인을 배치하는 강제는 작동하고 있었다.<sup>56)</sup>

또한 모집한 뒤 일본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부터 통제가 작동했다. 1939년 7월 29일 후생성발 직제60호 후생·내무성 양 차관의 지방장관 앞 통첩 「조선인노무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과 「조선인 노무자 모집요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내지 도항에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업에 모집하게 하고, 동원된 자에게는 ‘함부로 이동’하거나 ‘통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었다. 일본 도항 시 도망을 경계하기 위해 국가의 점검을 받았고, 이동열차의 출입구와 화장실에서는 동원업체 직원이나 경찰관이 끊임없이 감시했으며, 도시락·음료는 사원이 지급했다. 취로 후에는 지휘, 명령 불복종은 범죄로 취급되어 폭력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이처럼 이송과 취로 어느 경우에도 피동원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의미에서 모집단계에서 역시 강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sup>57)</sup>

1942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는 종래의 모집 방식을 바꿔 「조선인 내지

55) 巨明志, 2020, 152~3쪽.

56)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2005, 83~85쪽.

57) 守屋敬彦, 2006, 「朝鮮人強制連行方法とその強制性」『季刊 戦争責任研究』第51号, 12~21쪽.

이입 알선 요강」을 결정하고 관알선 방식에 의한 일본 송출을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로서는 조선 북부의 공업화를 위한 노동력 확보와 농업 생산의 유지를 위해 일본으로의 송출을 억제해야 했고, 일본 현지의 수용처 노동 조건에 대해 조선인 노동자가 불만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도 있었다. 일본 내에서도 2년 계약으로 모집된 조선인 노동자의 재계약률이 매우 낮은 데다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증산 요구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동원 계획을 세워야 했다.

관알선의 최대 특징은 행정기구가 동원의 주체로 전면에 나선 점이다. 1940년 1월 직업소개령 공포에 따라 관할 부서가 경무국에서 내무국으로 이관되었다. 일본으로의 노동 송출이 치안 문제에서 노동행정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관알선 시기는 이를 전 조선으로 확대한 것이다. 요강에는 부읍면 등 지방행정기구가 요원 확보의 주체가 되고, 경찰과 기업의 노무보도원이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노무보도원이란 도지사가 ‘노동자 공출’에 관한 사무를 촉탁하는 존재로 “사업주나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 또는 관계 산업단체의 직원”이다. 조선총독부는 노동력 동원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41년 6월 조선노무협회를 설립하여 조선총독부에 본부를 두고, 각 도청 내에 지부, 각 부군도(島)에 분회를 뒤 ‘노동자원의 개척, 모집, 알선’을 하게 했다.

그리고 일본의 석탄통제회와 동아여행사가 삼자일체가 되어 조선인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이송을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석탄통제회는 관알선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경성, 부산에 지부를 뒤 각 사업주를 대신해서 할당 공출을 조선노무협회와 절충했으며, 수송은 동아여행사가 전담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노동력 동원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동원 노동자를 군대식으로 편제했다. 즉, 5-10명을 1조로 해서 2-5개조가 1반(읍면), 다시 5반 내외를 1隊(부군도)로 구성했으며, 일본 현지에서도 가능한 대를 기준으로 배치했다. 동원 대상 지역도 경기, 강원, 황해 3개도를 추가하여 전 조선에 걸쳐 모집하였다.<sup>58)</sup>

그러나 관알선은 곧 문제를 드러냈다. ‘조선 노무의 결전 기여력’이라는 좌담회에서 조선총독부 노무사무관 田原実은 관알선이 “매우 웅색하여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송 도중에 도망치거나 애써서 광산에 데려가도 도주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등의 예가 매우

58) 前田一, 1943, 46~50쪽.

많아져서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징용도 당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반 강제적인 공출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관 알선을 하게 되면 석탄산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선에서는 머릿수 만 채우면 된다고 하여 부적당한 사람을 많이 넣는 폐해가 많아졌”다고 분석하였다.<sup>59)</sup>

좌담회에 참석한 (주)일본질소비료의 총무과장 池田饒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기자 : 양의 부족보다 오히려 질 저하가 문제인 거군요. 池田 씨는 어떠세요?

池田 : 제 쪽의 두통거리리는 필요한 만큼의 수를 얻을 수 없는 것과 이동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온 노무자가 연내에 거의 모두 나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관 알선으로 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연고 모집으로 온 것은 효율이 좋고, 절반 정도 머뭙니다. 결국 노동의사가 없는 사람을 머릿수만큼 무리하게 모아와도 소용없다는 느낌이 듭니다.<sup>60)</sup>

탄광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우선과제였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할당받은 머리수만 채우는 경향이 컸다. 따라서 노동능률도 떨어지고 도망자도 속출해서 목표로 제시된 생산량을 채울 수 없었다. 住友 鴻之舞鑛業所 소장이 美幌 현병분대장 대리에게 보낸 「선인노무자의 도주상황조사에 관한 건」(1942.9.8)은 “최근의 경향으로 조선의 노무 수급 정세상 징용령과 마찬가지로 할당 공출한 것을 보니 진실로 노무의식이 없거나 신체허약자가 많아, 이들은 반드시 이입 후 노무를 기피하고 이동하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sup>61)</sup> 이라고 분석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말단 행정기구가 신체허약자들도 마구 동원한 것이다. 사전에 기업의 노무계원이 확인했다면 신체허약자를 데려갈 이유가 없었다. 광업소는 동원된 조선인 2,727명 중 271명(9.9%)을 계약만료 전에 송환시켰는데, 그 중 128명은 건강진단 결과 채용에서 탈락된 사람들이었다.<sup>62)</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은 노무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모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이 직접 동원할 수 있는 ‘노동자특별알선’

59) 「座談會 朝鮮勞務の決戰寄与力」, 『大陸東洋經濟』 1943年 12月, 2001年 龍溪書舎復刻. 도노무라연구실 ([http://www.sumquick.com/tonomura/data/120723\\_02.pdf](http://www.sumquick.com/tonomura/data/120723_02.pdf))의 자료를 번역한 것임.

60) 같은 글.

61) 林えいだい, 1991, 1863-4쪽.

62) 林えいだい, 1991, 1273-4쪽.

또는 ‘자유모집을 가미한 특수한 관알선’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 요구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기업이 광고모집을 통해 직접 동원하는 방식으로 관알선이 농촌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노동자특별알선은 도시를 대상으로 실행되었다.<sup>63)</sup>

노무동원계획 이후 일본에 의한 집단 강제동원은 조선 농촌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44년 7월 내무성 축탁 小暮泰用이 조선의 민정동향을 조사해서 보고한 「복명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징용은 별도로 하고, 그 밖에 어떠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출동은 완전히 납치와 다름없는 상태이다. 그것은 만약 사전에 이를 알리면 모두 도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습, 유인, 기타 각종 방책을 강구해 인질적 약탈·납치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다. 왜 사전에 알리면 그들은 도망하는가. 요컨대 거기에는 그들을 정신적으로 끌어당길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과 조선을 통해 노무관리의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것은 때때로 그들의 심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잔류가족의 생활 곤란 또는 파멸이 일어났기 때문이다.”<sup>64)</sup>

「복명서」에는 小暮가 직접 조사한 사례도 나온다. 경북 의성읍 중리동의 金本奎東(23세)는 1943년 7월 1일 관알선으로 홋카이도로 갔다. 관알선 때는 본봉 95엔에 수당을 합쳐 월수입 130엔이 될 것이라 하여 계약하고 갔으나, 1년 가까이 되어도 송금도 없고 소식도 없어 집에 남겨진 63세의 노모 1명이 병과 생활고로 빈사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런 실정이 의성뿐만 아니라 서선, 북선 지방에 매우 많아 송출 가정의 잔류가족 원호가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평가했다.<sup>65)</sup>

이런 실정 때문에 통치상 “잔류가족의 보호는 긴급을 요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석탄통제회 동부지부는 1944년 10월 12일 「조선인노무자내지송출개선강화개요」를 각 광업소장에게 전달하면서 피징용자 외에 관알선 노동자에게도 원호를 실시하며 피징용자와 질적인 차별이 없게 할 것을 요청하고, 가족 송금도 ‘일괄송금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송금처는 郡島로 할 것, 가족송금은 매월 이행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sup>66)</sup>

63) 古庄正, 2002, 「朝鮮人強制連行と廣告募集」, 『在日朝鮮人史研究』 32 참조.

64) 「復命書」(小暮泰用→管理局長竹内徳治), 63쪽.

65) 같은 글, 66-7쪽.

66) 張澤秀 編, 1992,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Ⅱ, 綠蔭書房, 211, 214-5쪽.



모집·관알선에 의한 동원이 강제성을 띠고 있고 있었다는 것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동상황과 도망 원인을 조사한 〈표13〉, 〈표14〉에서도 잘 드러난다.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35% 정도가 작업장에서 도망하였다. 도망한 원인으로 든 갱내작업의 공포와 선동 유혹, 대우 불만은 모두 노동조건과 관련한 것으로 47.4%를 차지하며, 20.9%를 차지하는 계획 도주와 도시생활 동경은 동원 이전부터 도망할 목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우연이 말한 조선청년들의 ‘로망’은 바로 이 도시생활을 동경해서 모집에 응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른바 부정도항자와 강제동원 대상자 간에는 계층 차이가 있었다. 즉 부정도항자는 도항비를 마련할 수 있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땅을 가진 소작농·중농·자소작농이었다.<sup>67)</sup>

〈표13〉 이주조선인 노무자 이동 조사(1942년 10월말 현재)

지방별	이주한 수	減耗歩合					10월말 현재 歩合
		도주	병으로 송환	만기 귀국	사망	기타	
福岡	—	44	3.5	3.4	0.5	6.9	41.7
常磐	—	34.2	9.6	11.6	0.8	2.8	41
札幌	—	15.6	4.5	15.8	2.1	2.5	59.5
합계	—	35.6	4.3	7.3	0.9	5.5	46.4

참고 : 본조사는 1939년 10월부터 1942년 10월말까지 석탄광업의 이입 총수에 대한 동태이다.  
출전 : 前田一, 1943, 『半島勞務者の勞務管理』, 133쪽.

〈표14〉 조선인 노동자의 도망 원인

단위 : 명, %

	전국	후쿠오카	홋카이도
계획적인 도주를 한 자	5,946(13.8)	2,757(15.2)	164( 2.9)
도시생활을 동경한 자	3,058( 7.1)	1,066( 5.9)	180( 3.2)
선동 유혹	10,062(23.4)	5,370(29.6)	197( 3.4)
갱내작업의 공포	8,026(18.7)	5,136(28.3)	626(11.0)
대우 불만	2,300( 5.3)	516( 2.8)	150( 2.6)
전직	3,687( 8.6)	2,062(11.4)	174( 3.0)
기타	9,952(23.1)	1,212( 6.7)	4,217(73.9)
합계	43,031(100.0)	18,119(100.0)	5,708(100.0)

경찰의 동향보고에도 유사한 분석이 있다. 모집 첫해인 1939년에 동원된 2만 명 중 도망자는 5백명(2%)이었으나, 1944년 초에는 30만 명 중 10만 명(30%)이 도주하였다. 도주지는 대체로 도쿄, 오사카 등 도시가 많고,

67) 樋口雄一, 1998, 『戦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1-1939~1945』, 社會評論社, 47쪽.



거기의 토건업과 군수공장 등에 잠입한 것이 많다. 도주의 원인은 정보국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도항 수단, 방랑벽, 갭내 작업의 위험, 도시 생활 동경, 계약과 다른 대우, 유혹 선동’ 등이 있다. 이 중 조선인의 유혹선동을 보면, “자유도항 때의 조선인이 악질 브로커가 되어 다른 산업으로 끌어내는 것이 가장 많다. 특히 탄광 등에는 이것이 많다. 심한 경우는 반도 노무자가 下關에 상륙하자마자 유혹의 손을 뻗치고 있어 브로커 단속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고했다.<sup>68)</sup> 토목 관계에서는 1942년 동원 노동자 1만 7천 명 중 45%가 도망했으며, 규슈의 석탄 방면에서 50%, 전 산업 평균 30%가 도망하였다. 철강 관계의 조선인 노동자 총 16,532명 중 도주율은 京浜 5,371명 중 33%, 阪神 6,004명 중 32%, 中京 675명 중 40%, 九州 1,961명 중 53%, 東北 2,531명 중 15%로 총수 5,500명 33%의 도주율을 나타내고 있다.<sup>69)</sup>

강제동원에 대해 소극적인 저항이라 할 수 있는 도망은 현지뿐만 아니라 조선 내에서도 부터 거세게 일어났다. 전남 영광군에 출장한 노무보도원이 北炭 부산주재원에게 보낸 1944년 5월 31일자 「영광군송출전말서」에는 “26일 군에서 출발하기까지 64명을 모으지 못했다. 군청까지 연행 중 도주한 자들이 속출하고, 또 불구자나 노인(자식이 도주해서 아버지가 대신 나온 자), 병자 등 다수 있어 결국 40명을 인계받았다. 그리고 인계 후에도 송출에 무리가 있어, 가족 등과 군직원 면직원 사이에 대난투가 있었다. … 이 사이 또 6명의 도주자가 나와 자동차에 승차시킨 자는 34명이 되었다. 다시 송정리에서 4명이 도주해서 30명이 되었으며, 열창에서 1명 도주, 여수에서 병으로 송환시킨 자 1명, 결국 항구 출발은 20명이 되었다.”<sup>70)</sup> 라고 보고했다.

## IV. 맺음말

식민지근대화론자나 강제노동부정론자들은 식민지 사회가 폭력과 민족 차별에 기초한 사회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식민지 사

68) 思想對策係, 半島人問題(思想對策研究會 報告書 第2輯), 1944년 8월(水野直樹, 戰時期殖民地統治資料 第7卷, 柏書房), 292-3쪽.

69) 같은 글, 293-4쪽.

70)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纂委員會 札幌學院大學北海道委託調査報告書編纂實室, 1999,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70-1쪽.

회의 설계자들은 민도의 차, 즉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지배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족별 임금차는 이우연이 주장하듯이 숙련도=경험의 축적 차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차별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민족별 임금차는 식민지 기간 동안 대체로 2:1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수당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철되었다. 관료계의 이러한 차별 시스템은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어 관료계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전쟁 말기로 가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증산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허구적인 내선일체를 정책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제는 기본급 체계를 단일화한다. 이 때문에 민족별 임금차가 줄어들긴 하나 차별의 체계는 방식만 변형되어 유지되었다.

이우연은 ‘근속연수’를 사용하여 탄광노동에서의 민족별 임금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6-1개월)을 지난 뒤부터는 근속연수가 출탄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탄광노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다 근속연수만으로는 임금차를 해명하지 못하는 방법론상의 잘못을 범하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냈다. 즉 증명할 수 없는 자료로 증명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탄광 노동에서 민족별 임금차가 식민주의에 근거해서 설계된 차별임을 탄광 자료들은 말해주고 있다.

모집, 관알선, 징용으로 이어지는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은 일본 국가의 노무동원계획 하에 전개되었다. 노동력 선발과 이송, 취로 전체에 걸쳐 식민권력이 개입하고 있었다. 특히 관알선의 시기 말단 행정기구는 기업의 요구하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까지 무리하게 동원했다. 이 때문에 생산성도 오르지 않았고 동원된 노동자의 도주율도 평균 30%를 넘었다. 식민지배 말기로 갈수록 동원의 폭력성은 더욱 확대·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소극적인 저항인 도주도 조선 내에서도부터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동원의 방식이 아니라 강제노동에 있다. 설령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도일 했다 하더라도 현지에서의 노동이 국제규범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것을 일본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럼에도 강제노동부정론자들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호소를 거짓말로 몰아붙이고 있다. 역사해석을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부정의 잘못을 범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강제동원·강제노동 부정론에 대한 종합적 비판」에 대한 토론문

정 병 욱 (고려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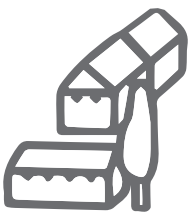
### 1. 단상들

- (주최 측에 대한 질문) 왜 비판 대상자를 토론자로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의 현실, 학문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회한...
-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학술적으로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반사적으로 자신의 바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2.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의 '李의 논문'에 대한 지적(주 32)은 발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발표문도 '개인별 임금대장'을 다루고 있지 않다. 즉 "임금 차별 유무를 증명해주지 못하는 파생자료"로써 차별을 설명하려 한다.

### 3. 강제동원과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

-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신일철 측의 상고 기각)의 의의: '식민지 지배 = 불법'을 전제로 한 판결. 획기적. '식민지 지배 책임론'의 전파·확산이란 과제
- ※ 2001년 더반Durban 선언: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선언에 '노예제도'를 반인류적 범죄로 규정, 그러나 서구 주요 국가들의 반대로 '인종주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문제는 선언에 반영되지 않아.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범죄 규정도 사과와 배상도 반영되지 않음.
- ※ 2009-13년 영국의 케냐 '마우마우' 탄압 재판, 2009-11년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아라와게데 마을 학살 재판이란 예외
-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들에 의해 시작된 '강제동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식민지 지배책임론'에서 중요한 위치. '강제동원' 조사는 그들의 삶에, 일본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추적할 필요 → 이타가키 류타의 일련의 작업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1955-65)』 오타 오사무, 허은 편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 2017, 소명 등) 현재 한국사회에서 '강제동원' 조사와 연구가 갖는 의미? 성찰적 접근 필요... 인천시 또는 인천시민은 1931년 반중국인 폭동 때 여기서 조선인이 죽인 중국인 2인의 추모비를 서울 의향은 없는지...



#### 4. ‘강제동원’을 둘러싼 한일갈등에 대한 소견

- 1) 명확한 사과와 배상 없는 협상/합의는 하지 말라: 기금 마련 등 돈에 연연하여 사안을 흐리지 말기 바란다. 박정희 정부 이래 계속 반복해왔던 문제. ‘문희상안’도 유사.
- 2) 도덕적 우위를 점하라: 정부 대표는 원고(피해자)를 찾아뵈 뒤 허락을 받고나서 다음과 같이 선언 “더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이 문제로 대화하지 않겠다(‘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자의 소송 결과 배상판결이 나오면 일단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지불하겠다(피해자의 피해는 나라가 없어 당한 피해이며, 그간 입은 고생과 모욕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물론 어디까지나 피해자 측의 양해를 전제로 해야). 앞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반성과 사과의 뜻으로 배상하려 한다면 그 기회를 줄 용의는 있지만, 그런 뜻이 담기지 않는 돈은 받지 않겠다.”
- 3)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갖는 ‘폭력’, ‘반인권’의 문제를 계속 끈질기게 세계에 알리자: 매년 8월 15일(또는 위 판결일 10월 30일)에 국회에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 피해 생존자를 초청하여 연설을 경청하는 행사를 열고 이를 전 세계에 중계하자. 전후해서 문화, 학술 행사를 열어 ‘차별 철폐, 폭력 근절, 인권 존중’을 세계로 발신하자(참고, 독일 의회, 매년 1월 홀로코스트 추모 행사로 생존자 초청 연설회 개최).



특별기획전 「조병창, 끝나지 않은 역사」 연계  
국사편찬위원회 - 인천도시역사관 공동학술회의

## 일제 말 성·노동 동원의 실상과 ‘강제성’

발행일 2020년 9월 10일

발행처 국사편찬위원회, 인천도시역사관

북디자인 디자인하다 MK

일러스트 임아리

